



①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연구소
제1차 남북이산가족 상봉 1985. 9. 20

꿈결에도 보고 싶었던 두고 온 가족과의 만남

제1차 남북이산가족 상봉 1985년 9월 20일

눈앞에 두고도 보지도 못하고 데려오지도 못하는 설움.

1,000만 이산가족의 한을 풀기 위해 수없이 시도해왔던 노력들은

분단 이후 35년 만에 첫 물꼬를 트기 시작했습니다.

남측 35명과 북측 30명의 역사적인 첫 상봉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2만 5천여 명의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까지 상봉신청자 수는 13만 명이지만,

이중 살아계신 분들은 7만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가족과의 만남처럼,

통일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뤄야 할 우리의 소망입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민족 화해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05
+
06
2015
MAY / JUNE
VOL.74

기획 남북 주민 간 '마음통합' 어떻게 할까

인터뷰
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
도법 스님



Contents

Vol.74 2015. May / June



04

02 포토 에세이

길은 함께 만난다 | 이경형

04 인터뷰 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 도법 스님

“남북은 끝내 함께 살아가야 할 식구라는 것, 이보다 더 큰 진실은 없습니다”

10 시선 대 시선 권만학 vs 유호열

남북관계 돌파구, 어떻게 열까
조건없는 남북대화 선행되어야 vs 북한을 유인할 전략 필요하다

18 광복 70주년 연속기획 - 통일로 가는 길 ②

능동적 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우리 내부의 선결과제 | 박영호

22 기획 남북 주민 간 '마음통합' 어떻게 할까

- 예멘의 교훈 | 국민 지지 얻는 내적 통합이 필수 | 김국진
- 대북지원의 '접촉공간'
대북지원을 통한 만남과 소통, 남북의 마음통합에 기여 | 이우영
- 남북 주민 동거단지 사례연구 | 남북 주민의 생활 속 만남,
타자에 대한 인정과 성찰이 중요 | 이수정

COVER STORY 북으로 가는 농업협력 물자

지난 4월 28일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농업협력
영농물자를 지원하기 위한 트럭 20여 대가
육로를 통해 북한으로 향하고 있다.
이번 지원은 재단법인 에이스경업에 의해 이뤄졌다.



민족화해 2015년 5-6월호(격월간, 통권 74호)
등록번호 종로, 마00069
발행일 2015년 5월 1일
발행인 홍사덕 편집인 이경형
홍보위원장 김영만
편집기획위원 공용철, 김용현, 노태호, 오한샘,
윤법달, 정영태, 정은미, 정진아
편집장 이운식 편집부 이현희, 염규현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9, 구세군회관 3층
전화 02.761.1213
홈페이지 www.kcrc.or.kr
디자인 및 제작 (주)풍경인소풍 070.7433.1123

34 이슈 앤 포커스

- AIB 창설, 동북아 건설시장 확대와
북한 인프라 개발의 중요 계기될 듯 | 이백진
- '핵 보유' 딜레마의 북한, 스스로 변화할 기회 조성해줘야 | 김동업

42 통일을 일구는 사람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민족과 함께 해온 한의학,
통일의 매개체 · 한반도의 위대한 유산으로 거듭날 것”

46 남북협력 돋보기

- 남북산림협력으로 '대화통로', '환경통로' 만들자 | 박경석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축적된 노하우 바탕으로 다양한 협력사업 준비 | 김민서

52 길에서 만나는 평화와 통일

탈북청년모임 '위드-유(with-U)'
탈북청년들, 멋진 통일 위해 좌우 날개로 비상하다 | 편집부

56 문화 모니터 연합뉴스TV “북한은 오늘”

북한의 빠른 변화, '객관적 눈'으로 전달하는 통일 길라잡이 | 심은진·김혜미

58 남북 너나들이

소설로 바라보는 남북의 서로 다른 뿌리 이야기 | 오태호

60 미리 만나는 통일 풍경 고구려 유적지 여행

찬란한 역사의 숨결이 흐르는 그곳에 가다 | 한희진

62 레인보우 코리아

러시아 유학생이 본 한반도 통일의 과제 | 이휘성

64 젊은 통일 · 신나는 통일

우리 하나 되어 통일의 문을 열자 | 임성은

66 민족화해 네트워크

70 남북관계 새로 나온 책

72 독자 의견

22



34



42



52

길은 함께 만난다

초여름 늪지의 갈대밭은
눈이 시리도록 질푸르다.
갈대밭도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
줄, 부들, 피, 방동사니도 끼어 있다.
물 바닥에는 마름, 말, 가래, 개구리밥도 있다.
방죽 아래 오솔길에는 고라니 똥들도 눈에 띈다.
습지의 생태도 이렇게 한데 어울려 살고 있다.

온통 초록 물감으로 두껍게 칠한
캔버스 위로 두 갈래의 서로 다른 길이
한데로 모여 굽게 힘차게 앞으로 다가온다.

서울에서 평양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을 두고
그동안 서울~워싱턴, 베이징~평양으로 에둘러 다녔다.
블라디보스토크~하산~두만강 철교~나선~원산을 거쳐서라도
우리는 만나 서로 얼굴을 매만져 보자.
벌써 다른 길을 걸은 지 70년이 되지 않았다.
지금은 너의 길, 나의 길이 따로 있다고 하지만
머지않아 우리는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갈 것임을 알고 있다.

이경형 편집인

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

도법스님

“남북은 끝내 함께 살아가야 할 식구라는 것, 이보다 더 큰 진실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진실, 그것은 북한의 동포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한민족, 같은 식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전제를 기본으로 하여 남북관계를 바라본다면 그다음 문제는 쉽게 풀릴 것입니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남북이 반복하고 대립해 온 것은 서로에 대한 불신과 분노, 두려움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결국 같이 살아야 할 식구’라는 마음으로 풀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통일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원효 대사의 화쟁사상에 입각해 중재하고 풀어내는 역할을 자임한 조계종 화쟁위원회. 여기에 위원장직을 맡아 2010년부터 지금까지 전국을 누비며 화합과 통합의 손길을 내밀어 온 도법 스님은 이처럼 남북관계의 해법을 ‘진실’로부터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 4월 21일 조계사에서 스님을 만나 화쟁과 결사 그리고 통일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대담 이경형 『민족화해』 편집인

정리 염규현 민화협 정책홍보팀 부장

사진 김성현 객원작가

“조금은 다른 생각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남북 문제를 푸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이 아닌 우리 사회 내부의 ‘남남갈등’이라고 봅니다. 우리 내부의 소모적인 정쟁, 진영 싸움 말입니다. 남북문제는 매우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또한 지속적으로 나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야 바람직하게 문제를 다뤄 나갈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보수진영이 집권하면 남북문제를 오른쪽으로 끌고 가고, 진보진영이 집권하면 왼쪽으로 끌고 갑니다.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니 일관성, 지속성이 있을 리 없지요. 이런 모습이 남남갈등을 일으키고,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초래합니다. 결국 이 문제를 풀려면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주 단순화시켜서 북한 주민들을 제거해야 할 적, 악마로 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함께 살아야 할 동포로 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북한 동포들은 함께 살아야 할 식구라는 인식에 합의하고 정리한다면, 그러한 전제에 맞춰 남북문제를 다뤄 나가게 될 것이고 지금보다 훨씬 힘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죠. 또한 보수는 진보든, 북한에 대한 입장이 확고히 정해졌기에 정책



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향과 기조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게 남북문제에 있어 가장 큰 관건이라고 봅니다.”

한 치의 망설임도 없는 목소리. 도법 스님이 바라보는 남북문제는 이처럼 단순하고도 명쾌했다. 남과 북이 오랫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살아가야 할 운명공동체,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울며 살아가야 할 식구라는, 무엇보다 명확한 진실을 받아들이자면 그다음 문제들은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화쟁정신, 이치에 어긋나지 않는 진실을 찾는 것

18세의 나이에 출가한 도법 스님은 지금까지 생명평화의 가치, 다툼 없는 평화로운 사회 만들기애 많은 공력을 기울여왔다. 1990년 불교결사체인 선우도량을 만들어 청정불교운동을 이끌었고, 1995년엔 지리산 실상사 주지로 부임하여 귀농학교, 대안학교, 환경운동 등 인드라마 생명공동체 운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2004년 실상사 주지 소임을 내려놓은 후, 생명평화 탁발순례의 길을 떠났다. 이후 5년 동안 3만 리의 여정을 통해 8만 명의 사람들을 만나 생명평화의 가치를 전했다. 이런 스님이 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장을 맡은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원효 스님의 화쟁사상과 정신을 바탕으로 불교계는 물론 우리 사회의 수많은 갈등과 반목을 소통과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풀어내기 위해 지난 2010년 만들어졌다. 그 후 지금까지 강남 봉은사의 중단 직영사찰 문제 등 불교계 내부 갈등은 물론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해소,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문제 해법 등 굵직한 사회 현안에 대해 슬기로운 해법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원효 스님의 화쟁사상, 도법 스님은 이 쉽지 않은 사상체계를 그만의 화법으로 알기 쉽게 풀어낸다.

“화쟁사상을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억지로 아주 단순화시켜서 보자면, 불교의 세계관에 관련된 것인데 이 우주는 함께 살도록 되어 있다는 큰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불교의 기본적인 세계관인 ‘우주 삼라만상이 모두 공존과 조화를 이뤄야만 이 세상이 원만히 돌아가고 인간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인간과 자연의 관계,



저는 그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다툼을 화해시키고
더불어 함께 사회통합적으로
문제를 풀고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그걸 찾기 위해 가는 것이죠 ♡♡

지역과 지역의 관계, 인종과 인종, 가치와 가치의 관계, 구체적으로는 너와 나의 관계를 볼 때, 결국 다 함께 살아야 한다면 다투고 적대하는 방식으로서는 문제를 풀 수 없지 않을까요? 어쨌든 만나야 하고, 함께 해야 하고 서로 소통해야 하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서는 협력해야 하고 균형을 이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같은 식구라면 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물론 쉽지 않습니다. 현실은 늘 대립과 갈등, 분노와 두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 다툼을 화해시키고 화합의 길로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화쟁인 것입니다.”

도법 스님은 이를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중 첫째가 ‘진실을 잘 드러내는 것’이다. 오직 진실만이 너와 내가 동의할 수 있

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도 동의할 수 있고, 나 역시 동의할 수 있도록 진실을 잘 드러내는 것. 원효의 화쟁론에서는 이를 ‘이치에 어긋나지 않게’라고 표현하고 있다. 진실에 어긋나지 않게, 왜곡시키거나 덮지 않고, 무시하지 말고 잘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함께 살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가치라고 스님은 강조한다.

“제가 그동안 밀양이나 제주 강정마을 등 안 가본 곳이 없어요. 갈등과 다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 어느 한 편에서는 ‘도법은 우리 편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반대편에서는 ‘저 스님은 우리의 반대편이다’라고 규정지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다툼을 화해시키고 더불어 함께 사회통합적으로 문제를 풀고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그걸 찾기 위해 가는 것이죠. 바깥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규정하는지에 대해서는 관계없이 저희의 입장은 늘 그래왔습니다. 편 가르기 하지 말고, 진영 싸움하지 말자는 것이죠.”

도법 스님의 두 번째 가치는 ‘정서를 거스르지 않는 것’이다. 즉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자는 것. 가급적이면 서로 상처를 주어 감정을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진실을 잘 짚어내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상대의 감정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것. 결국 ‘화쟁’이란 다툼을 화해시키고 더불어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 것이다.

“우리 속담으로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싸움이 있는 곳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나. 결국은 ‘싸움은 말리고 흥정을 붙이는’ 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면서 더불어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바로 화쟁이다. 그렇게 저는 설명을 하고 다닙니다.”

만나면 치유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 사회의 격렬한 갈등과 대립의 현장 속으로 뛰어들었다. 종교의 현실참여, 또는 정치문제 참여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로부터 진심을 의심받거나, 때론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개의치 않았다. 소통과 화해를 통해 함께 살아가자는 마음 하나면 못 풀 문제가 없다고 믿었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였다.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격렬한 불안과 공포로 기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좌우의 대립, 동족상잔의 비극이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의 분단현실로 이어지고 있죠. 이러한 좌우 대립의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극단적인 정쟁, 진영 싸움을 이어갈 수밖에 없어요. 좌우 막론하고 결국은 함께 살아가야 할 민족이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100년이 다 되어가는 동안 그 아픔을 치유하지 못하고 풀어내지 못해, 대단히 소모적인 형태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뿌리가 되어 사사건건 무슨 일만 생기면 정쟁으로 가고 진영 싸움으로 격화됩니다. 세월호 문제가 바로 그래요. 이 문제를 어떻게 진영 싸움이나 정쟁으로 풀 수 있습니까. 현재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매년 300조 원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재관 건수도 630만 건이 넘어요. 이는 그만큼 우리 삶이 황폐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걸 풀자는 것이 화쟁위의 출발이자 현재입니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격론과 갈등이 첨예하게 이뤄질 때, 화쟁위는 종교계에 제안을 했다. 종교계가 나서서 극심한 사회갈등을 풀어보자는 취지였다. 기독교, 원불교 등이 함께 하여 대화마당을 마련했다. 국토해양부장관을 비롯해 4대강사업 본부장, 여당의 사무총장이 자리에 나왔고, 반대 입장에서는 야당의 최고위원, 사업반대 대책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사업을 둘러싸고 그토록 갈등이 극심했는데, 화쟁위가 만든 자리가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처음이었다. 화쟁위는 일단 논의구조를 만들고 그 안에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합의하고 정 안되는 부분만 남겨다시 심도 있게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사업 예산이 강행처리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 했다.

쌍용자동차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해고노동자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는데, 종교계가 나서 사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극심한 대립과 분노는 결국 양측 모두에 상처만 남길 뿐이라고 믿었다.

“중재의 역할을 하는 이들에겐 일정한 권위가 필요합니다. 양측이 무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종교계에 제안을 했어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우리가 먼저 나서서 사회통합적인 방향으로 풀어보자. 그렇게 해서 종교인 33인 원탁회의를 꾸렸어요. 그리고 노사 양측을 열심히 설득했죠. 해고노동자는 물론이고 회사의 노조, 사장, 정부 관계자 등을 만나고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해고노동자들이 저희에게 큰 불만을 나타냈어요. 종교계가 당연히 약자의 편에서 싸워줘야지, 무슨 중재냐는 소리였죠. 물타기 하는 것이냐는 비난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결국 그들의 생각도 변했어요. 자기들을 우습게 본다고 불쾌하게 여겼는데, 아주 조금씩이지만 진전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확인한 것이죠. 화쟁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 시작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회사 사장의 변화였습니다. 처음 사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을 때에는 해고자는 논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했어요. 하지만 꾸준히 설득하고 이야기를 나눈 결과 해고자도 논의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또 회사에서 해고노동자들을 안 받아들이는 이유 중 하나로 내세운 것이 회사의 노조가 반대한다는 것이었거든요. 한때 같이 일한 동료였지만, 이제 서로 어색하고 불편한 사이가 된 거죠. 그런데 이들을 화쟁위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했어요. 그렇게 증오하고 불편해하던 사이를 말이지요. 첫 만남이 있고 난 뒤에 양측은 계속 만남을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감정이 많이 풀렸어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의 가능성을 찾아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결실을 맺지는 못하였다. 처음에 종교계 수장들이 나와 기자회견을 하고 종교계의 역할 제안을 했는데, 후속조치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도법 스님은 종교계 수장들이 이후 활동 진척 보고도 받고 그것을 토대로 무언가 나온 제안을 계속 이어가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타 종교가 변화를 일으켜 이탈하고, 그 이후 동력을 회복하지 못했다. 스님은 종교계가 두 번 정도 제 역할을 이어갔다면 쌍용자동차 문제를 대선 전이나 직후쯤에는 매듭 지을 수 있었을



01 2012년 10월 5대종교대표들이 쌍용자동차 농성장을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다.

02 2013년 12월 종교인 시국발언 토론회

03 2014년 11월 김영란법 제정 촉구 공동기자회견

지도 모른다고 아쉬워했다.

“그전까지 종교계가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다루는 것에 있어 경험이 없다 보니 서툰 측면들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끝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죠. 때문에 상당한 진척을 이뤘음에도 결실을 보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어요. 참 아쉬웠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남북관계의 포용력 발휘하자

도법 스님이 추구해온 화쟁의 정신, 생명 평화의 가치는 남북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쌍용자동차 문제를 풀어갈 때 화쟁위는 ‘가족’이

란 개념을 사용했다. 쌍용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노사 양측은 쌍용자동차란 이름으로 결합된 공동체, 즉 가족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해가 엇갈린다고 하여 극단적으로 마치 원수처럼 서로를 대한다면,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호소했다. 가족이라면 머리를 맞대고 함께 살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지, 대결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호소가 작용해서였는지,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던 회사와 해고노동자들은 조금씩 마음의 여지를 열어갔다. 도법 스님은 바로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진실’이라고 말한다. 회계장부를 어떻게 처리했네, 노동자가 어떤 행동을 했네 보다 더 중요한 진실, 바로 ‘가족’이라는 사실 말이다.

아울러 서로 가지고 있던 두려움과 분노, 불신을 최소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양측 모두 상대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과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상태에서 대화와 타협, 소통과 화해는 어렵다. 화쟁위는 양측 모두의 이야기를 듣고, 양측 모두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지점들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서로를 설득했다. 그 과정을 통해 두려움과 불신을 조금씩이나마 해소해 나갈 수 있었다.

남북관계 역시 마찬가지이다. 남북 모두 상대방에 대한 오랜 두려움과 불신, 분노를 안고 있다. 이것을 풀지 못한다면 대화와 타협은 불가능하다. 상대방을 공존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함께 살 공리를 해야 한다. 상대를 압박하고 없애버려야 할 존재로 여긴다면, 분단 70년은 분단 100년, 200년이 될 지도 모를 일이다.

“이렇게 북한을 같이 살아야 할 식구로 인정한 다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감입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는 경제 강국이다 뭐다 하며 자랑을 실컷 하다가도 막상 남북문제를 다루는 것을 보면 북한과 같은 수준으로 가버려요. 사실 우리가 여러 측면에서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잖아요. 어찌 보면 만형의 입장인 것이죠. 그럼 형답게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야죠. 자신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포용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민간차원의 남북교류는 과감히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중심을 명확히 잡고 나아가고요.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나누어 열 것은 자신감 있게 열고, 지킬 것은 지키면 됩니다. 북한에 대한 명확한 인식 그리고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포용력을 발휘한다면 분명 남북관계는 지금과 다른 방향으

로 전개될 것입니다.”

화쟁위원회는 지금도 꾸준히 소통과 통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싸워서 승부를 낸다고 살기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재판을 잘했다고 사이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불신과 적개심을 걷어내는 것이 우선이다. 때문에 화쟁위는 ‘진실과 화해의 대화마당’을 꾸준히 열고 있다. 소위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가 만나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다. 종북문제, 김영란법, 세월호 참사, 공무원 연금개혁 등 사회의 주요 현안과 갈등의 이슈들을 찾아 함께 소통하고 해법을 모색한다. 도법 스님은 이러한 좌우의 만남, 중재가 성과를 거둔다면 이를 공론화시켜 더 이상 상처와 고통으로 남지 않도록 할 생각이다. 누가 뭐라 하든 결국 ‘싸움을 말리고 흥정은 불일’ 사람이 필요한 법이니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풀어내고 소통의 길을 열어가는 것은 민화협이 가치와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민화협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 사회가 갈등을 해소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면 이는 곧 남북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남남갈등이 치유되면 분명 남북갈등도 풀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직하게 나아가는 것, 화쟁위와 민화협의 역할 이자 과제 아닐까요?”





이상만

남북관계 돌파구, 어떻게 열까 조건없는 남북대화 선행되어야 vs 북한을 유인할 전략 필요하다

이번 '시선 대 시선'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여전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5·24조치 문제와 현재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개성공단 임금문제를 살펴봤다.
남북관계의 핵심적인 과제인 북핵문제에 대한 해법,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준비하는 6·15와 8·15행사를
어떻게 슬기롭게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도 나누었다.
전문가들의 남북관계 해법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은 달랐지만,
다가오는 6월부터 8월까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 동의하며,
남북 당국의 전향적인 행동을 제언하기도 했다.
대담은 4월 23일에 진행됐다.



권만학



유호열

이상만(사회) 광복 7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남북관계는 별 진전 없이 5월이 오고 있다. 현재 남북관계
경색이 왜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지 말씀해 달라.

유호열 5·24조치, 금강산관광 중단 등 전 정부부터 이어져 온 남북관계 단절 상황에서 이에
대한 돌파구가 마련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또 북한은 지속적으로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비롯
하여, 한국과 유엔 차원에서 진행된 북한 제재에 대해 비판해 왔는데,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
나 체제로 인정하지 않고 교류협력이나 대화를 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환경적 요인이
큰 것 같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상황을 신뢰 프로세스라는 새로운 접근으로 풀어 나가려 했
지만, 여전히 북한의 강경한 입장과 흡수통일 등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
에 대화다운 대화가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권만학 지금 경색이 전 정부에서 이어받은 것이란 측면에서 경색의 이유보다 경색을 왜 타
개하지 못하는가가 중요한 것 같다. 우선은 북한이 남한과 반드시 교류협력하고 대화해야 할
유인이나 압박 요인이 없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기능주의적 접근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본

사회
이상만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대담
권만학
경희대학교 국제대학 국제학과 교수

유호열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정리
이현희 민화협 정책홍보팀장
사진
김성현 객원작가

☞ 정부의 기본 노선은 대화나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



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기능주의 접근에 굉장한 유인 전략을 가지고 대북지원과 교류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이명박 정부는 5·24 조치 등 유인을 끊으면서 압박을 통해 북한변화를 가져 오려 했지만, 이 역시 실패하고 경색만 지속됐다. 기능주의적 접근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시도됐지만 결국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대화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유인 요인을 던지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의 오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흡수통일을 연상케 하는 정책을 보이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본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준비, 흡수통일 오해 불러일으켜

VS

정부의 기본노선은 대화와 교류 통해 남북관계 풀다는 것

이상만 두 분 모두 북한이 현 정부의 정책을 '흡수통일'로 받아들이고 있어 남북관계 경색이 풀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했다. 이에 대해 북한의 오해라는 입장과 오해를 살만한 내용들이 있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것 같다.

권만학 정부가 통일대박을 이야기하는데 통일에 있어 대박만 나고 비용이 안 드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다. 결국 북한 정권이 붕괴되고 이를 우리가 인수해 특수

지역으로 관리하며 개혁개방을 시켜야 가능한 일이 아닌가. 통일은 필수적으로 많은 비용이 드는데 이것 없이 대박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논리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게 된다. 그리고 독일 드레스덴에서 대북제안을 한 것도 이런 의혹을 증폭시켰다. 드레스덴은 독일이 통일되기 전 동독 공산정권에 대한 평화혁명이 시작된 곳이고, 1989년 10월 초 프라하 서독대사관에 있던 탈 동독자들을 실은 자유의 기차가 서독으로 갈 때 지나간 곳이다. 이렇듯 유인 요인은 없이 흡수통일 같은 압박요인만 드러난 상황이기엔 경색국면을 벗어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유호열 북한이 남북대화와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부분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것은 맞다. 외부로부터의 지원과 현금 수입원이 차단되었을 때는 남한의 지원과 협력이 규모와 관계없이 절실한 부분이었다. 그런 면에서 북한 나름대로 양보하는 접근도 했었다. 지금은 중국에 광물수출, 러시아에 인력수출 등을 통해 돈이 들어오는 창구가 확대됐다. 그러다 보니 남쪽에서 주는 지원은 조건에 맞으면 좋지만, 남쪽이 생색내거나 다른 것을 하려는 것은 싫다는 것이다.

권 교수님과 다른 의견은 정부의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흡수통일에 대한 생각이나 전략이 없다는 것이다. 드레스덴 연설은 대북제안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에 한국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의지와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었을 때 성과 등을 설명하려는 측면이 컸다고 본다. 통

일대박론도 통일의 비전을 제시하는 차원이지만 북한붕괴는 아니다. 오히려 정부의 기본 노선은 대화나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북한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발전한 북한을 상대로 협의에 의해 통일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권만학 통일담론 자체가 자기 부정적인 예언이라고 본다. 나도 시장경제나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 외에 다른 통일을 상상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공론화하는 순간 북한에게는 정권과 체제가 무너지고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어 버린다. 통일을 언급하는 순간 우리가 원하는 합의 통일로 가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통일담론을 너무 확대시켜 놓으니까 결국 흡수통일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통일논의는 미래세대에게 맡겨야 한다.

유호열 앞으로 통일담론이나 교류협력의 방향을 북한이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과 우리 내부에서 어떻게 합의를 만들어 낼지에 대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통일준비위원회가 새로운 시도인데, 구성을 보면 진보적 활동을 하는 분들과 보수적 시각의 분들이 함께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활발히 논의한다. 이를 확대해 보면 통일에 대한 우리 나름의 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이 아니겠는가 생각한다.

5·24조치, 구조적 남북관계 신뢰구축과 연계해 풀어야

VS

북한의 전향적 태도 변화 선행되어야

이상만 두 분이 현재는 북한에 대한 압박 및 유인 요인이 없다는 것에 동의했다. 그리고 고려해야 할 다른 하나는 북한 김정은 체제의 패러다임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5·24조치의 실효성이 많이 상실됐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는가.

권만학 중국이 북한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5·24조치의 실효성은 거의 없어졌다. 초기엔 충격이 있었지만 북한이 적응하면서 극복했다. 그래서 5·24조치를 통해 사과를 받아내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만약 우리가 북한의 사과와 태도변화를 연계해 5·24조치를 해결하려 한다면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천안함 사건을 북한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5·24조치를 해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유감 표명 등 외교적 용어는 가능하다고 본다. 문제는 우리가 5·24조치를 해제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있다면 무엇을 위해 하는가이다. 만약 우리의 5·24조치 해제 의도가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이라면, 5·24조치만 두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남북관계를 바꾸겠다는 전략이 필요하다. 전반적 구도를 신뢰 조성 방향으로 정비해 나간다면 유감 형태의 이중적인 사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구조적인 신뢰 구도를 만들려고 한다면 북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고 흡수통일을 연상하게 하는 논의를 자체해야 한다.

유호열 5·24조치는 실효성과 관계없이 천안함 폭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것의 완하나 해제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 5·24조치 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과 대화와 논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5·24조치 안에서 유보 조항이나 해석여부에 따라 교류협력이나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허용해 왔다. 특히 제3국에서 북한과 접촉하고 사업을 대범하게 추진하는 것을 보면, 조치에 대한 경직된 해석보다는 유연하게 접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본다. 5·24조치의 효용성 보다는 조치의 완화를 위한 북한의 전향적 태도 변화,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 이것을 수용하고 전략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만 5·24조치를 천안함과 연계해 풀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경제학자들도 인정하나 조치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문제들이 있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를 교환하면 자연스럽게 화해가 올 것이고 통일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비평화통’ 정책으로 가지는 것이다. ㉹㉹



기 때문에, 결단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 아닌가 하는 의견도 많다. 선행적으로 조치를 풀겠다는 정부의 결단 속에서, 천안함 문제를 같이 풀어야 하는 것 아닌가.

유호열 5·24조치는 북한과의 문제도 있지만 국내적 문제도 있다. 북한이 변화가 없는데 우리가 해제한다고 했을 때 국내적으로 현 정부의 기반이 되는 보수층의 반발이 상당할 것이다. 5·24조치를 통해 제한하고 있는 것이 대규모 지원이나 민간교류협력인데, 북한도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면 나름대로 성의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핵문제를 비롯하여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평화체제 구축 문제 등에 대해 북한이 전향적 자세를 보이면, 조치가 취해졌을 당시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요인이 희석되면서 새로운 대화와 교류협력으로 바뀌어 갈 수 있다. 물밑 접촉이든 공식적인 형태든 대화를 통해 이런 논의가 진전되면 결단이 가능할 것이다. 상황이 조성되면 결단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다고 본다.

권만학 협상이 되려면 서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5·24조치를 한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이것을 해제하려면 북한이 무언가를 내놓아야 하는 것도 있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카드를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예전처럼 대규모 원조를 할 생각이 없다. 북한도 이득을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유감 표명을 하겠는가. 때문에 더 큰 틀에서 남북관계 개선이나 긴장완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

금처럼 상대방을 반국가단체로 인식하고, 적화통일하려는 침략자로 인식한 상황에서는 기본적 신뢰 형성이 어렵다. 상대방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할 때 비로소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

북핵문제, 북한의 국가성 인정하는 바탕에서 풀어야

VS

핵 보유국가 인정 안 돼, 남북관계 특수성 유지해 나가야

이상만 남북의 경제적 차이와 국제관계 등을 봤을 때 북한은 구조적으로 흡수통일 우려를 가지고 있기에 정부가 노력해도 불식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어떤 노력을 통해 이런 북한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겠는가.

권만학 한국의 경제력이 크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남한 존재 자체가 북한에게는 위협인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흡수통일의 위협이 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우리가 세계적 표준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북한은 체제 위협으로 느낀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북한 주민에 대한 직접 지원을 이야기하는 것도 주민과 당국을 분리시켜 자유의 바람을 불어 넣으려 한다고 인식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북한과 통일한다는 언급 자체를 피했으면 좋겠다. 장기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북관계의 당면한 문제는 북핵을 해결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 무장을 하고 그것이

완결되는 순간 우리는 핵 그들과 핵 공갈 속에서 살게 된다. 확장 억지론만으로는 핵 공격에 대응하기 어렵다. 우리가 핵 무장을 하기 힘들니 방어에 힘쓰는 것인데 방어는 불안정하다. 수없이 날아오는 미사일 중 하나만 놓쳐도 수십만 명이 죽는다.

핵 공갈과 공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핵화가 선결과제인데 이는 북한에 대한 국가성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풀 수 있다. 그다음 적대성을 종식시키면서 평화공존으로 가자는 것이다. 국가성 인정에 대해 국내에서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을 텐데, 북한이 이미 160여 개의 국가와 수교를 맺고 있고 유엔의 회원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국가성을 인정하는 대신 핵 개발 동결을 합의하고, 그다음 ‘완전하고 검증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CVID)’를 하면서 평화체제를 교환할 수 있다면 북핵 문제와 남북대결을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하다 보면 통일의 기회도 생길 것이다. 요약하면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를 교환하면 자연스럽게 화해가 올 것이고 통일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비평화통’ 정책으로 가자는 것이다.

유호열 비핵화와 평화공존은 기본노선이다. 통일방안뿐 아니라 유엔동시가입, 그동안의 남북정상회담도 모두 그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이다. 대신 남북관계와 핵문제는 대단히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북한이 설사 핵을 보유하고 있고, 100개의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역량이 있더라도 핵 보유국가로 인정할 수는 없다. 우리가 북한의 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합의나 노력도 존재가치가 없어진다. 북한의 핵 보유를 추정하면서 대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북한을 핵 보유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국가성 인정은 남북기본합의서, 유엔동시가입 등에서도 인정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국가성을 인정하고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정립되면 대외적으로는 국가로, 남북 간에는 특수 관계라는 이

중적이고 복합적인 관계의 장점을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 현실적으로는 어차피 되어 있는 국가관계를 우리가 명시적으로 함으로써 통일을 위한 우리의 준비, 북한 주민에 대한 우리의 보호권을 스스로 포기해 버리는 상황이 된다. 이중성과 특수성은 통일이 될 때까지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성공단 갈등, 협상과 대화 통해 절충점 찾아야

VS

정치적 논쟁보다는 경제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이상만 최근 현안 문제는 개성공단이다. 임금 문제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의 성격이 과거와는 다른 것 같다. 우선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 영향을 주고 있고, 경색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 개성공단은 교류협력의 마지막 보루인데 해법은 무엇인지 말해 달라.

유호열 개성공단은 교류협력과 대화의 창구 기능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세금을 통해 운영 지원하는 것을 국민들이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으면 공단의 활성화와 장기적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진출 기업들이 북한에 주는 임금은 명목적 가치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기업들은 정부가 투자하고 보전하는 부분을 통해 이익을 얻고 있는 측면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임금이나 조건을 강화하면 기업 자체가 정상 활동을 하기 어렵다. 북한이 다른 지역에서 임금을 얼마 받기 때문에 개성공단도 그렇게 받아야 한다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북한의 정치 논리에 빠지는 것이다. 임금 문제는 남북 간 협상이나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지 북한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리면 개성공단의 존재가치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최근 북한이 여러 경제특구를 만들고 외국자본을 유치하려 하는데, 투자자들의 입장은 여전히 북한이 불안한



지역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남한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투자 환경을 만들지 않고, 남한이 정치적 입장에서 대규모 지원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북한도 경제발전을 하려는 입장에서 변화해야지 모든 조건을 입맞대로 가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기업, NGO가 북한에 대한 일관된 메시지를 주고, 대북접근에 대한 국내 합의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북한과 대화하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

권만학 개성공단은 경제적으로 성공한 모델인 것 같다. 양쪽이 그만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중소기업들도 경제성이 있어 공단을 유지하고 있고, 북한도 공단은 선불리 건드릴 수 없다고 보는 듯하다. 2013년 북핵 위기 속에서 중단되었던 경험을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연간 9,000만 불의 돈보다 53,000여 명의 실업자가 더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 같다. 그 정도의 핵 위기 속에서도 북한이 포기할 수 없는 가치를 공단이 가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성공모델이다.

이번 임금 문제는 남북관계의 주도권 측면도 있겠지만 어쩌면 좀 더 경제적 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북한 지역에 중국이나 러시아 기업들이 들어가면서 임금이 올랐다면, 우리가 주는 임금에 대해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만약 경제적인 이유라면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임금이 다른 곳보다 적

다면 올려주면서 계속 있을지 아니면 나올지 경제적 차원에서 결정하면 된다. 2013년 공단 폐쇄를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북한도 이 정도 위기로는 공단을 볼모로 잡는 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고, 우리 정부도 기업이 100여 개 이상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만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2~3단계 개발로 크게 나가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규모가 더 커질 경우보다 큰 핵 위기 속에서 공단이 핵의 볼모로 잡힐 수도 있다.

6·15남북공동행사,

정부와 민간이 협의해서 슬기롭게 풀어야

이상만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8·15가 남북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다. 남북관계가 8·15 전후로 풀렸으면 좋겠는데 6·15가 중요 바로미터가 될 것 같다. 그런데 6·15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내부에 엄청난 시각차가 있다. 6·15 부분에 대해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이것이 8·15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지 의견을 달라.

권만학 6·15는 북한이 매우 중시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누군가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 현재 남쪽에서 준비하는 것을 보면 야성이 강한 단체들도 있고 더 온건한

단위들도 있는데, 정부는 아직 저들만의 행사로 방임하고 있는 것 같다. 얼마 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 8·15를 전후해 다양한 남북공동행사 계획이 있던데, 북한과 대화 자체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정말 8·15가 6·15와 연계되어 있고, 8·15를 통해 남북 간에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면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6·15행사에 정부가 참여하고, 여야가 참여해 남북관계 발전을 원하는 사람들의 기념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북에서도 올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를 통해 8·15를 준비하는 접촉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대화와 교류를 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게 하는 북한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이다. 그런 것이 없다면 6·15로 남북대화과 협력의 물꼬를 트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정부가 8·15를 염두에 두고 이를 위한 디딤돌로 6·15를 활용하겠다는, 6·15행사에 대해 정부와 주최 측이 내용적으로 협의해 건설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유호열 대통령은 6·15정상회담이나 공동선언에 대해 기본 정신이나 내용은 100% 존중하고 있다고 본다. 6·15남북공동행사에 대해서도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닐 것이다. 다만 북한이 6·15만 하고 나머지를 안 했을 때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있다고 본다. 올해 다양한 광복 70주년 행사가 있는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함께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을 것이다. 6·15를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보다는 어떤 의미로 추진하고 어떤 수준에서 진행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6·15가 일방적으로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행사가 된다면 정부로서도 조율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6·15행사 내용에 대해 정부와 사전 협의하고, 협의를 바탕으로 건설적인 행사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좋다. 합의를 했는데 예기치 않게 정치적 행사, 우리 정부를 곤욕스럽게 하는 행사가 된다면 이후의 후유증도 클 수밖에 없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열린 자세로 할 필요가 있다.

이상만 남북관계 경색 원인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이다. 남북관계 돌파구의 핵심과제는 무엇인지 제언해 달라.

유호열 조건없는 대화가 선결과제다. 우리 정부도 여러 번 대화하자고 했는데 북한은 아직 답이 없다. 북한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것처럼 책임 있는 대화로 나오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대화를 하게 되면 평화문제와 교류협력 등 모든 의제를 다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뀔 수밖에 없지만, 우리 내부에서 대북정책 추진에 대한 소통과 공감대를 확보해 정권이 바뀌어도 남북문제에 대한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권만학 대화만으로 경색국면을 벗어나긴 어렵다. 그동안 대화의 문을 열어놨지만 경색국면이 지속됐고, 새로운 아이디어 없이는 얻을 게 없다. 지금 경색국면은 진보정부와 보수정부가 동시에 추진한 기능주의적 접근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돌파형 리더십과 정책이 필요하다. 기능주의 정책은 대화와 교류뿐 아니라, 북한의 핵 무장을 막는데도 실패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국가성 인정과 비핵·평화를 교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성 인정과 핵 동결을 연계할 수 있고, 그다음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를 연계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러한 프로세스가 진행되면 남북 간 신뢰관계도 형성될 것이고 남북관계 돌파구뿐 아니라 화해도 올 것이다.

이상만 올해를 넘기면 경색국면 돌파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제 6·15가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6·15부터 8·15까지가 남북관계 전환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인 듯하다. 유연할 땐 유연하고, 설득할 땐 설득해서 두 달 동안 역사적인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능동적 민주주의식, 통일을 위한 우리 내부의 선결과제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민족화해」는 광복 · 분단 70년을 맞아 연속기획
‘통일로 가는 길’을 준비했다. 지난 호 ‘통일담론
의 변화’에 이어 이번 호에는 ‘통일을 위한 우리
내부의 환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통일이라는 민
족의 숙원을 위해 우리의 내적 준비는 얼마나 되
어 있을까. 그리고 무엇이 필요할까. <편집자 주>



역사의 흐름은 도도하다.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해방
되었을 때, 우리 민족의 분단이 이처럼 길어질 것으로 예
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동족상잔의 전
쟁은 분단 구조를 우리의 가슴 속 깊이 내재화시켰다. 남
북한 체제의 차이는 관념의 차이로, 관념의 차이는 생각
의 차이로, 생각의 차이는 가치관의 차이로 변하고 굳어
졌다. 그러한 가운데 남북한은 각각 자기의 방식으로 분
단 극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광복 70주년을 맞으면서 동시에 분단 70년을
맞이해야 하는 우리에게 작금의 한반도 상황은 매우 엄
중하다. 구한말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열강의 각
축 현상이 형체와 내용만 다를 뿐 지금 다시 우리의 눈앞
에서 전개되고 있다.

물론 오늘날의 한국은 세계가 놀랄 만큼 성공적인 발
전을 이룬 나라다. 세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힘이 없던 조선이 아니다. 그렇지만 한반도의 지
정학적 구조는 변하지 않았으며, 그 주변국가의 힘은 오
히려 더 강해졌다. 그들 간의 이해관계도 간단하지 않다.
더욱이 분단 극복의 과정에 함께 동참해야 할 북한은 이
제 ‘핵 국가’를 자임하고 있다. 독일의 ‘통일둥이’들이 25
살의 활기찬 청년으로 성장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해방
둥이’들은 70살의 노인이 되었다.

통일을 향한 우리의 길은 결코 녹록지 않다. 지난 70
년의 남북관계를 회고해보면, 분단 70년이 눈 깜짝할 사
이에 분단 100년이 될 수도 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
러한 상황을 물려줄 수는 없지 않은가?



01+02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
복으로 우리는 민족의 독립을 맞이했다. 1948
년 광복절 당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식장에
가기 위해 광화문 일대로 몰려든 시민들(왼쪽)
과 현재의 광화문 일대 모습 ©연합

• **관용과 타협의 정치문화 필요해**

인류 역사가 주는 교훈의 하나는 스스로 준비하지 않고 능력을 갖추지 못한 나라는 지구상에서 도태되거나 후진국으로 남아 있게 된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은 이러한 교훈을 뒤늦게나마 깨닫고 각성한 결과이다.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달성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이다. 세상의 어떤 국가도 나서서 한반도의 분단 극복을 위해 애쓰지 않는다. 한반도의 통일이 자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침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통일의 방해세력이 될 것이다.

결국 통일의 성취 여부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외부 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하며 내부 역량과 환경을 튼튼하게 구비함으로써 통일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고 통일의 과업을 성취해야 한다.

광복 70주년의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남북관계는 말할 것조차도 없고 외부 환경 조성 또한 크게 부족하다. 특히 우리 내부의 역량이나 환경은 '통일대박'을 거론하는 것이 민망할 정도다.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 관용과 타협의 정치문화가 결여되어 있다. 1980년대 후반 권위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화를 이루면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성숙을 기대하였다. 민주주의는 합의된 절차를 존중한다. 또 자유와 자율은 반드시 책임을 동반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의 현실은 성숙한 민주주의로 진화하기보다는 민주화가 가져온 자유만을 만끽하려는 어리석음을 보여주었다.

우리의 정체가 권위주의 체제로 후퇴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책임을 동반하지 않는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은 이념과 지역으로 우리 사회를 분절시켰다. 민주화 이후 역대 모든 정부는 사회통합 또는 국민통합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았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 동안 벌어진 수많은 갈등의 현상을 보라. 북한·통일문제에 있어서도 자기 편만의 주장을 고집하는 결과를 낳았다. 대북·통일정책을 둘러싸고 등장한 남남

갈등이 바로 그것이다. 최적의 정책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합리적 논의보다는 이념과 지역, 정파적 이해와 혼재된 논쟁이 일상적으로 벌어졌다. 특히 '국민 지지'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정파적 이익을 위해 정쟁에 매몰하는 정치권에서 타협의 정치문화는 실종되었다. 또 이념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소수의 극단세력은 합리적 논의 구조를 왜곡시킨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말로만의 성찬으로 끝날 뿐이다.

민주화 이후 역대 한국 정부는 대북·통일정책에서 '국민적 합의'를 정책 기조나 원칙으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각 정부가 내세운 정책에 공감하는 것을 국민적 합의 기반 형성으로 보았다. 그것은 권위주의 시대의 강요된 합의이지, 각자의 의견과 차이를 존중하면서 공유하는 생각을 모아가는 합의나 공감대 형성의 방식이 아니다.

•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설득과 통합의 리더십**

둘째, 설득과 통합의 정치 리더십이 결여되어 있다.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은 구체적 성과를 거두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1970년대 초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래 2014년 말까지 2회의 정상회담, 8회의 총리급 회담, 20회 이상의 남북장관급회담 등 640회에 가까운 대화와 접촉이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당국 간 회담이 남북관계의 본질을 바꾸지 못했다. 대화와 접촉의 양이 남북관계의 질적 변화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하여 북한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면서 기다릴 수만도 없다.

의미 있는 남북관계를 창출하기 위하여 때로는 인기가 없는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다. 당대 정권이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이 항상 최선의 것은 아니다. 국내, 남북관계, 국제적 상황의 변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대북·통일정책이 국내정치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 또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수준은 가변적이다.

대북·통일정책의 추진에서는 특히 이러한 모든 것을 감안한 설득과 통합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통합은 설득을 통해 이룰 수 있다. 설득은 소통으로부터 나온다. 소통은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

민주화 이후 역대 한국 정부는

대북·통일정책에서 '국민적 합의'를

정책 기조나 원칙으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각 정부가 내세운 정책에 공감하는 것을

국민적 합의 기반 형성으로 보았다.

정이지 지시가 아니다. 결국 다양한 의견을 가진 국민들과 소통하고, 정책적 입장이 다른 정파와 사회집단을 설득하여 통합된 정책을 추진할 때, 기대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셋째, 지속가능한 정책이 결여되어 있다. 민주화 이후 우리는 6번째의 임기 5년 정부를 경험하고 있다. 그런데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은 지속성보다는 단절성을 더 보여주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는 자기 고유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배제의 정치는 배제의 정책을 낳았다. 화해·협력정책, 평화·번영정책, 상생·공영정책,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명칭이다. 정책목표, 원칙과 기조 등에서 형식상 상당한 공통점이 있고 정책의 계승 또는 진화를 공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연속성 수준은 낮다. 정권의 성격이 달라질 때 정책은 더욱더 단절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 국민의 통일에 대한 자발적 의식 수준이 높아질 수 있을지 우려된다.

•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책임의 정책' 추진해야**

통일의 필요성을 교육·홍보하고, 통일준비를 정책적으로 강조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분단 70년이 분단 100년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통일정책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정권의 성격과는 무관하게 대한민국 정부가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느낄 때, 통일준비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 공감대

가 커다란 어려움 없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국민의 자발적 참여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통일은 만들어가는 것이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대한제국이 자주와 독립의 근대국가 수립에 실패한 것은 부패한 권력자들의 책임이 막중하나 개명하지 못한 백성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선각자의 말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금언(金言)이다. 정책결정자에게는 권한이 위임되거나 부여되었으나 동시에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을 실제로 책임지도록 만드는 것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민주적 정치참여이다. 국민 세금으로 공공영역의 일을 수행하는 정책당국자가 책임 의식을 갖고 정책을 수행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세월호와 같은 사건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책임의 정책' 수행은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에도 해당한다.

동시에 국민들은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통일의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통일을 말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북한에 우리와 같은 민족적 뿌리를 가진 수많은 동포가 고통의 삶을 살고 있고 분단으로 인해 우리가 치르지 않아도 될 유형·무형의 부담을 안고 산다는 점을 깨닫는다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국가로 출범한 지역 중 한반도만이 여전히 분단 상태에 있다. 광복 70주년은 이러한 점을 다시 한 번 각성토록 하는 역사적 계기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전쟁의 폐허 위에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통일은 말로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써 실현될 수도 없다. 그러나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능동적 민주시민이 된다면 통일을 향한 문은 분명히 열릴 것이다. 🌐

박영호는 미국 신시내티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근무하였으며, 1991년부터 통일연구원에서 연구위원을 거쳐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한국정치학회 부회장과 한국세계지역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기획

남북 주민 간 '마음통합'
어떻게 할까
-
예멘의 교훈

국민 지지 얻는 내적 통합이 필수

김국신 통일연구원 명예연구위원

01 지난 4월 초 예멘의 사나에서 후티 반군들이 거꾸로 된 하디 예멘 대통령의 초상화를 들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예멘 공습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



01

• 예멘의 분단은 외세 식민통치에 기원을 둔다.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홍해에 인접한 전략적 위치 때문에 예멘은 강대국 세력다툼의 각축장이 되었다. 예멘은 1871년부터 오트만 터키제국의 지배를 받았는데, 1839년 영국은 남예멘 항구 도시 아덴을 점령해 인도양 진출 거점으로 삼았다. 북예멘 지역은 1918년 독립해 회교군주국을 수립했다. 1962년에는 군사혁명을 통해 예멘아랍공화국을 선포했다. 북예멘 지역에서 회교 공화국이 수립된 후 남예멘 지역에서는 좌익 게릴라 세력이 영국군과 무장투쟁을 전개해, 1967년 남예멘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 이념대립에 의한 분단체제를 형성한 것이다.

남북예멘은 20여 년간 분단을 유지하며 국경분쟁과 통일원칙에 대한 합의를 반복했다. 남북예멘의 보수 강경파들은 무력통일을 추구했다. 반면 무력통일의 어려움을 인식한 북예멘 진보 정권과 남예멘의 실용주의 정권은 화해협력을 통한 평화공존을 모색했는데, 이들의 통일정책은 각기 보수 세력의 강한 반발을 초래해 내부 권력투쟁 격화의 진통을 거듭했다.

북예멘 함디 대통령은 개혁정책으로 국민들의 인기를 얻었지만, 남예멘에 대한 포용정책과 좌파 민주 세력에 대한 관용적 태도는 보수파와 부족 세력의 반발을 초래했다. 함디 대통령은 남예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아덴을 방문하기 전날인 1977년 10월 11일 암살된다. 이후 남예멘 알리 나셀 정권은 실용주의 대외정책으로 장기적인 평화공존 상태를 유지했다. 그러나 그의 정책도 가시적 경제성장을 달성하지 못해 강경파들의 비판을 받았다. 알리 나셀과 친소 강경파 간의 권력투쟁은 1986년 1월 남예멘 내전을 발발시켰고, 여기서 패배한 알리 나셀은 결국 북예멘으로 망명했다.

남북예멘의 통일협상 과정은 통일정책이 분단체제 내부의 정치·사회 세력의 권력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통일협상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양측 합의사항에 대해 각기 국내적 합의를 이뤄야 함을 보여준다. 통일협상이 분단체제의 정권 대 정권 그리고 양 체제의 정권 대 내부 정치 세력 사이에서 전개되는 이중 게임이라는 사실은 남북한이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합의에 의한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통일방안에 대한 남북한 정부 차원의 합의 이전에 각기 국민적 합의를 먼저 도출해 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남북예멘의 경험은 전쟁을 겪으며 적개심을 축적해 온 분단국가에서 '적이 된 동족'을 포용하는 문제가 단순한 '합리적 선택'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합의통일에서 무력으로 완결된 예멘통일

통일협상이 합의점을 찾게 된 것은 석유발굴로 인한 예멘인들의 심리적 변화와 냉전체제의 붕괴 때문이었다. 그러나 북예멘이 남예멘에게 유리한 통일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남예멘이 통일에 관한 국내적 합의를 이루기 어려웠을 것으로 평가된다. 1990년 초 협상과정에서 북예멘 살레 대통령이 권력배분 문제에 관해 남예멘 측에 과감히 양보해 통일정부 권한을 남북예멘이 동등하게 행사하기로 합의하자 협상은 급진전되었

다. 북예멘 인구의 1/4밖에 되지 않은 남예멘이 통일 정부의 관료직을 북예멘과 동등하게 분배한다는 원칙에 만족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합의통일 방식은 북예멘 보수 세력의 심한 반발을 초래했다.

예멘은 1990년 5월 22일 마침내 합의통일을 달성한다. 그러나 남북예멘의 정부 조직을 기계적으로 합병함으로써 통일정부 조직은 비대해졌고 일관성이 결여되었다. 여기에 8월 걸프전 발발은 통일예멘의 정치·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켰다. 남북예멘은 1993년 4월 첫 총선 실시 후 재분열의 위기를 겪었고, 1994년 7월 북예멘군이 남예멘 수도 아덴을 점령해 무력으로 통일을 다시 완결 지었다.

1994년 내전 종식 후 살레 대통령은 남예멘 관리 및 군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대사면령을 발표하고, 남예멘 주민들의 정치적 소외감을 무마하기 위해 민주주의 및 언론의 자유 보장을 강조하며 핵심 분자들을 제외한 예멘 사회당 인사들의 제한된 정치 활동을 허용했다. 그리고 1994년 9월 개정 헌법에 따라 의회에서 압도적 지지로 대통령에 재선된다.

1995년부터 1999년 사이에 연평균 4% 이상의 경제성장을 기록하는 등 내전 후 정치적 안정과 더불어 경제성장을 달성함으로써 살레 정부에 대한 지지는 더욱 강화되었다. 결국 1999년 9월 예멘 역사상 처음 실시한 대통령 직접선거에서 살레 대통령이 재선됨으로써 향후 5년간 재집권을 보장받았다. 이에 살레 대통령은 2001년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해 권력독점을 강화했다. 하지만 친인척 부패와 자기 부족 세력 중심의 권력독점은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통일의 영웅이라는 자만심에서 비롯된 문제였다.

반복되는 내전과 이념 갈등

중동 정세는 2001년 9·11테러로 급변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하자 이슬람 국가들이 미국의 군사개입을 비난했지만, 살레 정부는 미

국을 지지했다. 1990년 걸프전 당시 친이라크 성향을 보임으로써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제재를 받았던 경험이 있어, 현실적인 외교정책으로 전환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실용주의 외교는 국내 이슬람 보수 세력의 반발을 초래했다. 특히 미국의 2003년 이라크 침공은 예멘 사회의 분열을 가속화시켰다.

2004년 6월 북부 사다 지역에서 시아파 자이디 부족이 미국 주도의 반테러 전쟁에 대한 반감 등으로 무장봉기했다. 봉기를 주도한 국회의원 출신 후티는 그해 9월 사살되었지만, 후티 반군은 2004년 이후 이란으로부터 무기·재정·군사훈련 등을 지원받으며 세력을 확장했다. 한편 정부군이 북부지역의 반란 진압에 투입되고, 국내 정세가 혼란한 상황에서 알 카에다 집단이 예멘 중부지역에 새로운 거점을 형성하고 세력을 확장했다.

내전 이후 남부 주민들은 북부 출신 인사들이 정치·경제적 지위를 지배해 남부 출신이 소외되고 있다는 불만을 품어왔다. 특히 남예멘 지역에서 발굴된 석유자원의 수익을 북부 출신들이 독점하는 데 불만이 컸다. 2007년 5월부터 내전 이후 강제 퇴역당한 남부 군인들이 연금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전개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했고 그 후 정부 정책에 반감을 품은 남부 주민들은 과거 남예멘 국기를 펼쳐 들고 분리·독립을 요구했다.

살레 정부가 알 카에다, 북부 후티 반란군, 남부 분리주의 세력들로부터 복합적인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2010년 12월 튀니지에서 시작된 민주화 혁명이 이집트·리비아 등을 거쳐 예멘으로 옮겨왔다. 그리고 2011년 1월부터 사나에서 33년간 장기집권 중인 살레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시작되었다. 이후 정부의 강경진압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사실상 내전으로 전환되었다. 결국 살레 대통령은 2011년 11월 권력이양 및 연립정부 수립을 골자로 하는 걸프협력회의(GCC)의 중재안에 서명했다. 그러나 2011년 반정부 시위 이

후 북서부의 상당지역을 장악한 후티 반군은 중재안을 거부했다.

내적 통합 없는 통일은 더 큰 재앙 초래

2012년 2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남부 출신 수니파 인사인 압드라부 만수르 하디 부통령이 단독 출마해 당선됐다. 하디 대통령은 알 카에다 소탕 및 국가재건·통합을 강조하며 그해 10월 예멘 대부분의 정파와 부족을 망라한 ‘범국민대화’를 개최해 대타협을 모색했다.

하디 대통령은 범국민대화 결과를 토대로 새 헌법 초안을 마련, 국민투표로 이를 확정하고 총선을 실시해 정권을 새 정부에 이양할 방침이었다. 범국민 대화는 2014년 1월 ‘남부의 분리독립 요구를 연방제에 입각해 해결한다’는 내용의 최종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6개 지역(남부 2개 지역, 북부 4개 지역)으로 연방제를 구성하는 방안을 확정 짓고 대통령 포고령으로 공포했다. 그러나 헌법 개정에 불만을 품은 후티 반군은 수도 사나에서 시민 불복종 운동을 조직하여 2014년 9월 실권을 장악했다. 예멘 북부를 근거지로 하는 후티 반군과 과거 살레에 충성하는 정부군 고위층은 연방제로 석유 시설이 있고 자원이 풍부한 중부와 남부지역이 북부지역의 통제를 벗어나게 된다는 점에 개헌을 지지할 수 없었다.

후티 반군은 2015년 1월 대통령궁과 총리 공관을 등을 장악하고, 하디 대통령과 내각이 총사퇴했다. 이에 남동부 지역 주지사와 당국자들이 현재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수도 사나와의 관계를 단절하기로 결정했다. 후티 반군은 2월 의회를 해산하고 혁명위원회를 설립해 2년간 과도통치를 선언했다. 한편 하디 대통령은 사나를 탈출, 2월 아덴에 정착한 뒤 사임을 번복했다. 그리고 걸프국가들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하디 대통령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시아파 반군 후티의 정부 전복으로 정국이 혼란해지자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에 충

성을 맹세하는 무장조직이 등장했다. 2015년 3월 사나에 위치한 시아파 사원 2곳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했고, 이슬람국가(IS)는 자신들의 소행임을 밝혔다. 한편 후티 반군은 3월 예멘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타이즈를 장악하고, 이어 아덴 인근지역까지 진출했다. 그리고 곧 하디 대통령이 국외로 빠져 나갔다는 보도가 발표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곧 예멘 정부군 지원을 위한 전면 개입을 선언했다. 전투기 100대와 15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 이란이 지원하는 시아파 후티 반군을 격퇴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사우디 주도의 연합군에는 바레인·요르단·쿠웨이트·모로코·아랍에미리트 등 수니파 아랍국들과 파키스탄, 이집트까지 합류하기로 했다. 예멘 내전은 이제 ‘수니파 대 시아파’의 종파전쟁으로, 중동지역 전체에 걸친 군사적 충돌로 변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살레 대통령은 통일을 달성한 국민적 영웅이 되었다. 하지만 통일 후 20년 동안 장기집권하며 독재정치와 집권층의 부패로, 국민적 합의에 따른 안정과 성장을 방해했다. 더불어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미국에 대한 지지여부 또한 내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게 만드는 외부 장애요인이 되었다. 현재 하디 대통령은 통일국가 유지를 위해 후티 반군과 싸울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남예멘 주민들은 통일국가 재건보다는 차라리 분리독립을 선호하는 정서를 일부 표출하고 있다. 합의통일 이후 내전까지 겪으며 힘들게 유지해온 통일정부가 다시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예멘의 실패한 통일국가 사례는 단순한 물질적 통합을 넘어 통일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내적 통합이 통일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임을 뼈저리게 보여주고 있다. 🌐

김국산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 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를,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마쳤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국제관계연구실장, 동북아연구실장,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통일연구원 명예연구위원으로 있다.

기획

남북 주민 간 '마음통합'
어떻게 할까

— 대북지원의 '접촉공간'

대북지원을 통한 만남과 소통, 남북의 마음통합에 기여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01 농업협력사업 현장에서 만난 남과 북
사진제공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01

• 남북한은 두 체제로 나뉘어 독자적으로 존재하여 왔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이뤄왔다. 그리고 남북한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호작용은 사회구조에서 일상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상호작용의 주체가 다차원적인 동시에 상호작용의 양상이 다양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남북의 사회 통합을 고민한다면 먼저 남북의 상호작용이 구조의 차원에서, 또 일상의 차원에서 어떤 효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제도의 통합과 달리 사회통합은 사회구성원들이 주체가 되는 것이고 이들의 일상이 남북관계의 변화과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통합 가운데 하나인 남북한 주민들 간 '마음의 통합'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마음의 통합도 한편으로는 남북관계라는 구조적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만 동시에 남북한 사람들의 직간접적인 만남의 과정에서도 일정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마음의 통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실제로 남북한 주민들의 '만남의 현장과 과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한 사회구성원들이 상호작용하는 공간을 '접촉지대(contact zone)'로 상정하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마음의 통합과정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접촉지대 통한 마음과 마음의 만남

접촉지대는 일반적으로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 사회적 공간을 일컫는데 금강산 지역이나 개성공단 등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접촉지대에서 남북한 마음체계의 만남은 예를 들어 사고방식에서 남한 사람의 업적주의·개인주의·다원주의와 북한 사람의 평등주의·집단주의·일원주의의 충돌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 대해 가지는 우월감이나 승자의 관용과 같은 정서가 북한 사람의 동경심이나 자존심과 조우하기도 한다. 서로 다른 도덕적 기준 '결과윤리와 동기윤리'의 대립과 규범, 남북한 관계의 미래에 대한 가치판단도 충돌할 수 있다. '민족'을 둘러싸고도 남북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면서 접촉지대로서 대북지원 사업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적인 대북지원 활동으로 다층적인 남북접촉이 이루어졌다. 둘째, 대북지원의 주체가 되었던 NGO의 실무자는 과거 민주화 투쟁의 경험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았던 집단이지만 대북지원활동을 통하여 북한에 대한 실질적 이해의 정도가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사업의 진행과 확산과정에서 반복적인



대북지원의 출발이 보편적인 인류애의 실현에 있었고,
대북지원에는 민족애적인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지원활동과 관련된 접촉지대의 마음체계 상호작용에서 가치의 부분이 상대적으로 타협의 대상이 된다.





02 남북의 의료인들이 함께 공동수술을 하고 있는 모습

03 농기계 수리공장에서 함께 한 남북 관계자들

04 남측의 의료인이 북측 의료인들에게 의료기기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사진제공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접촉이 이루어졌고 접촉을 유지하였던 남북 사람들의 접촉면도 심화되고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넷째, 대북지원의 형식이 긴급구호에서 병원건설, 농업지원, 농기계 제작, 교육지원 등 점진적으로 발전하였고 과거에 비해서 접촉양식이 구조화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으며 법적인 안전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제도화의 수준은 낮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대북지원의 공간은 북한영토가 중심이었다. 협상을 위한 공간으로 중국 등 제3국이 활용되기도 하였지만 개성공단 개설 이후에는 개성을 주된 협상장으로 활용, 실질적인 접촉의 공간은 북한영토였다. 여섯째, 남북 간의 접촉이라는 차원에서는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지만, 인도적 지원이라는 의미자체가 문물을 공여하는 입장과 원조받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관계의 불균등성을 내포하고 있다. 일곱째, 접촉의 주체가 다양화되면서 불균형적이라는 점이다. 남한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원 관련 단체의 활동가 중심이지만, 관련 사업의 전문가들이 접촉의 주체가 된다.

대북지원을 통한 '마음체계' 상호작용

대북 인도적 지원은 방법이나 주체 내용에서 차이가 작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현장을 경험

한 다양한 단체의 참여자 면접을 통해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특성은 차이가 크지 않은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적인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여자수혜자 관계에서 비롯되었겠지만, 남한의 우월의식과 북한의 패배의식이 깔려 있었다. 그리고 정치적 선입견의 존재,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갈등과 긴장이 반복된다.

둘째, 가치의 차원에서는 남북한 마음의 체계가 비교적 조화를 이루는 경향이 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체제 차이와 장기간에 걸친 대결적 남북관계에서 비롯된 가치관의 차이는 존재한다. 그러나 대북지원의 출발이 보편적인 인류애의 실현에 있었고, 대북지원에는 민족애적인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지원활동과 관련된 접촉지대의 마음체계 상호작용에서 가치의 부분이 상대적으로 타협의 대상이 된다.

셋째, 사고방식의 경우에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남북 '마음체계' 간에 적지 않은 긴장이 조성되었다. 남한 지원단체의 사람들은 남한 주민의 후원(경우에 따라서는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을 통한 효율적 사업 추진을 지향한다. 반면 북한의 실무자들은 관료제의 절차주의를 강조하고 있으며, 지역이나 대상 집단 간의 차별성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사업의 효과보다는 정치적 정당성을 판단이나 행위의 핵심근거로 삼고 있다.

넷째, 대북지원이라는 접촉지대에서 남북한 마음체계 상호작용의 특성이 비교적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접촉의 대상에 따른 마음체계 상호작용의 양상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사업 전문가보다는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다섯째,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북한 지원 활동을 하는 NGO의 경우에도 조직단체별로 차별성이 적지 않다.

여섯째, 접촉이 반복되면서 남북한 주민들의 마음체계에 변화가 나타났는데 이것도 집단별로 차이가 있었다. 진보적 의식이 있거나 과거 민주화 운동의 경험을 가진 집단은 북한의 이념이나 가치에 동조하거나 이해하는 부분이 약화되는 등 가치부분의 변화가 있는 반면, 보수적인 성향의 대북관을 가진 사람들은 북한의 어려운 현실에 동정심을 느끼고 지원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었다.

오해와 갈등을 풀고 '마음의 통합'을 위하여

접촉지대로서 대북지원이 갖는 특성은 남북 주민들의 마음체계 상호작용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분단 이후 지속된 적대적 대결관계와 체제 차이에서 비롯된 마음체계의 이질성에서 비롯된 선입견과 정치적인 차원의 남북관계의 영향력은 대부분 접촉공간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런데도 다른 접촉지대와는 달리 공동으로 이루어야 할 사업 목적이 있다는 사실,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접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남북한 주민들이 상대에 대한 이해를 적극적으로 하는 집단이라는 사실 그리고 대북지원 실무자와 관련 사업 전문가들이 결합되는 접촉공간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 접촉은 상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풍부하게 하였고, 충돌과 타협을 반복하면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동시에 타협을 위한 협상의 기술도 발전시켜 마음체계의 순응에 도움을 주었다. 남한의 참여자들 가운데 과거 민주화 운동 경험자가 중심이 되어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고, 대북사업에 대한 사명감이 높은 집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참여자들은 직업의 차원에서도 지원사업의 성과가 반영되는 현실에서 상대적으로 마음체계가 상호작용에도 갈등을 피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대북지원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다층성은 상호작용 차별화의 원인이 되었다.

접촉지대로서 NGO 대북지원이 가져온 남북한 주민들의 '마음체계의 상호작용'은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하였던 중요한 현상으로 통일과정 특히 사회통합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대북지원 공간에서의 마음체계 상호작용을 살펴보고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변화과정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이우영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현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민화협 정책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장을 비롯해 정책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주요 저서로는 『북한체제의 이해』, 『북한 도시주민의 사적 영역 연구』 등이 있다.



기획

남북 주민 간 '마음통합'
어떻게 할까

남북 주민 동거단지 사례연구

남북 주민의 생활 속 만남, 타자에 대한 인정과 성찰이 중요 *

이수정 덕성여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조교수

01 지난해 9월 5일, 임진각, 마나산, 수봉공원 등 원거리에서 실시하는 망향제에 참석하지 못하는 몸이 불편한 남동구 인근의 북한이탈어르신, 노약자, 실향민들을 위해 논현동 통일통산에서 북한이탈주민 및 실향민을 위한 망향대제를 올렸다.

사진제공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01

필자는 2012년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한 임대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남북한 (출신)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부대끼며 살아가는 생활세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인천 남동구는 한국 사회의 구 단위에서는 북한출신주민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며 특히 임대아파트가 집중된 논현동 일대는 이들의 가시성이 두드러진다. 그런데 이 지역은 북한 출신주민보다 훨씬 많은 남한출신주민들이 일상을 꾸리는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 임대아파트 단지라는 장소의 특성상 이들 남한출신주민들은 대부분 사회경제적 소수자들이다. 따라서 남동구 논현동 임대아파트 일대를 오랫동안 남북으로 분리되어 살아온 사람들, 그중에서도 사회경제적 소수자들 간 일상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남북한 접촉지대(contact zone)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일상적 경험이 바로 미래 남북한 통합의 거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서로 분리되어 살았던 사람들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역동에는, 분리되어 각각 구축한 사회문화적 특징뿐만 아니라 만남의 조건이나 맥락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상적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남북출신주민들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 양상은 만남의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예측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 '접촉지대' 로서의 인천 남동구 논현동

논현동 임대아파트 단지 일대가 남북한 접촉지대가 된 것은 1차적으로 정치적, 영토적 경계를 횡단하여 한국 사회로 들어 온 북한출신주민들의 이주 덕분이었다. 이에 더해, 대규모 택지개발 중심의 한국 사회 주거정책과 한국 정부의 탈북자 지원정책, 특히 주거지원정책에 의한 '거주지 배정' 정책이 결정적이었다. 북한출신주민들은 집중 '배치 받은' 임대아파트 단지들과 주변 상점, 동네를 가로지르는 거리와 달리는 버스 등에서 남한출신주민들과 이웃으로 상호작용하며 남동공단의 어느 공장이나 동네 음식점 등에서 직장동료로도 만난다.

서로 다른 문화, 역사, 경험을 가진 남북한출신주민들이 일상에서 만나면서 갈등과 협상은 일상화된다. 문화 차이, 남북의 정치적 긴장, 이해관계의 충돌까지 갈등과 협상의 자원은 무궁무진하다. 이러한 갈등 양상의 원인을 중심으로 분류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6

서로 다른 문화, 역사, 경험을 가진 남북한출신주민들이
일상에서 만나면서 갈등과 협상은 일상화된다. 문화 차이, 남북의 정치적 긴장,
이해관계의 충돌까지 갈등과 협상의 자원은 무궁무진하다. 99

* 『현대북한연구』(2014) 17권 2호에 실린 필자의 글, “접촉지대와 경계의 (재)구성 : 임대아파트 단지 남북한출신주민들의 갈등과 협상”을 요약한 것이다.

남북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체제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 습성을 지닌 주체로 형성되었다. 남한 사회는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와 강한 노동 강도, 절제된 감정표현, 개인주의적이고 경쟁적이며 물질주의적 문화를 발전시켜 왔으며 북한 사회는 이에 비해 느린 속도와 느슨한 노동 강도, 솔직한 감정표현, 집단주의적이고 관계중심적인 문화를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이웃으로 살아갈 때, 이러한 문화 차이는 종종 구별과 차별의 근거가 되고 갈등을 유발한다. 예를 들어 많은 남한출신주민들은 북한출신주민들의 센 억양과 직설적 표현, 무리 지어 다니는 습성 등이 부담스럽다. 이들은 북한출신주민들이 만드는 ‘소음’이 함께 생활하는 데 가장 힘든 점이라고 이야기하며 ‘공중도덕 부족’을 언급한다. 북한출신주민들은 남한출신주민들의 부드러운 말투와 개인주의적 행태를 ‘겉과 속이 다른 것, 이기적이고 정이 없는 것’으로 불쾌해 한다. ‘솔직하고 뒤끝이 없는 북한사람들’에 비해 상대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각자에게 익숙하고 당연한 문화적 행태들이 부딪쳐 대표적인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문화적 차이는 남북한의 적대적 관계와 남북한출신주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처한 위계적 관계에 의해 프레임 될 때 폭발력이 크다. 남북한의 적대적 관계는 남북한주민들의 서로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끼치며 남한이라는 공간적 위치는 북한출신주민들을 소수자로 위치시키기 때문이다.

북한출신주민들은 낯선 환경에 주눅이 들고 남쪽 이웃들이 ‘못 사는 북한에서 왔다고 무시하는 듯’하다. 남한출신주민들의 ‘호기심’도 부담스럽다. 호기심은 북한출신주민들을 타자로 위치 짓고 결정적 순간에 레드콤플렉스와 결합되어 적대적 언행으로 바뀐다. 남북 사이 긴장이라도 조성되면, 어느덧 북한의 대표자로 간주되어 어김없이 화살이 날아온다. “고향이 그림고 가족이 걱정되고 그런 것이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충성이 아닌 데 남한 사람들이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같은 민족’으로 잘 어울려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2등 시



지난 4월 8일 북한이탈주민 일거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유휴농경지에 감자 등 각종 작물을 파종하였다.

민’이 된 느낌이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민감해진다. 남한출신주민들은 쉽게 화를 내고 센 말투로 자기표현을 하는 북한출신주민들이 불편하다. 호기심에 북한에 대해 물어보면 쉽게 역정을 내고, 북한에 대한 증오심이 확실한 것 같지도 않다. “짜그리 없애버려야 해”라고 하면 동의하기는커녕 어색한 웃음을 짓거나 화를 내는 모습에 ‘아직 빨간 물이 덜 빠진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분단이 생산한 적과 아의 이분법은 이렇듯 일상적 갈등의 주요원인이 된다.

문화적 차이, 정치적 상황이 주는 갈등

임대아파트라는 이들의 거주공간 자체가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사는 곳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주택계급으로 구성된 한국 사회에서 임대주택은 그 자체로 거주민들을 ‘하층민’으로 위치 짓는 가시화된 표식이다. 남한출신주민들은 임대주택 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 시선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 더불어 이들은 북한출신주민들이 이 공간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공간과 거주민인 자신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더 나쁘게 만들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기도 한다. 처음에는 임대주택과 거주자의 사회적 위치,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정보가 없던 북한출신주민들도 시간이 흘러 한국 사회의 문법을 익히면서 자신들의 거주지와 이웃 주민들의 낮은 사회적 위상을 파악하게 되고, 이는 북한출신주민 스스로의 처지와 이웃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계기 중 하나가 된다. 이렇듯 서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다른 요소들과 결합할 때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정부정책과 경제적 자원에 대한 경쟁도 갈등의 주요 원인이다. 이 또한 이곳이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집중거주지여서 비롯되는 바가 크다. 북한출신주민들은 한국 사회에서 집중적 정책지원의 대상이 된다. 자원이 부족한 사회적 소수자라는 이유 이외에도 이들이 남북통합의 과정을 미리 짐작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혹은 ‘먼저 온 미래’로 의미되기 때문이다. 북한출신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은 이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민·관 지원활동가들의 존재를 통해서, 정책전달자인 통·반장을 통해서, 아이를 같은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들을 통해서, 이웃의 목격담을 통해서 남한출신주민들에게 알려진다. 사회경제적 소수자인 남한출신 이웃들은 박탈감을 느낀다. “우리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데”, “평생 세금 한 푼 안 낸 사람”을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지원하는 건 아니다” 싶고 정부가 “버릇을 잘못 들이는 것 같다”, “역차별”이라는 불만들이 터져 나온다. 북한출신주민들은 남한출신 이웃들이 자신들이 받는 정책적 혜택을 감시하고 시기하는 듯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가능한 자신들의 삶과 정부 혜택을 숨기고자 한다.

생활 속 만남 지속으로 상호 이해 가능성 넓어져

물론 일상의 소소한 접촉이 친밀감의 증대에 기여하기도 한다. 일부 주민들은 음식을 나눠 먹고 마실 다니며 신뢰를 쌓아나간다. 무엇보다 이웃으로, 동료 학부모로,

직장동료로 이런저런 사람들을 접하면서 ‘남(북)한 사람들’도 다 똑같지 않다.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큰 소득이다. 서로의 삶이 언제 어떻게 얽힐지 모른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서 경계하는 마음을 누그러뜨리기도 한다. 비난하다가도 “재들도 다 예뻐해야 한다. 나중에 머느리 될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점에서 논현동 임대아파트 단지의 사례는 기본적으로 접촉이 분리보다는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접촉이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분리되어 적대하고 있던 남북한 사람들이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것은 그룹 내부의 다양성과 그룹 사이의 유사성을 인식하게 하여 편견을 깰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된다. 구체적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남한 사람, 북한 사람이 각각 단일한 집단이 아니라 개별적 특수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남북의 경계를 넘어 한민족으로서, 인간으로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편견을 깨고 소통의 의지를 강화시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례는 오랜 세월 서로 다른 사회 체제에서 살던 남북한 사람들의 만남이 쉽지 않음을 드러낸다. 문화의 차이 등 수많은 차이와 적대의 역사, 그리고 자원에 대한 경쟁이 이들 간 의사소통을, 그리고 관계를 가로막는다. ‘접촉’이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통합 과정에서 타자에 대한 인정과 성찰에 기반을 둔 상호 이해가 무엇보다 필요함을 잘 알려준다. 또한 이 사례는 접촉환경과 관련하여 평등한 관계, 자원분배의 형평성, 기본적 사회안전망 및 사회통합과 관련한 문화적 풍토 등의 중요성 또한 상기시킨다. 이러한 결과는 남북한의 주민들이 더욱 평등하게, 공동의 이해를 가지고, 삶의 불안정성이 적은 환경에서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함의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시작은 한국 사회를 그러한 사회로 만들어가는 일일 것이다. 🌐

이수정은 미국 일리노이대학에서 인류학박사 학위를 받고, (재)무지개청소년센터 부소장, 북한대학원대학교 조교수로 근무하였으며 현재 덕성여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AIB 창설, 동북아 건설시장 확대와 북한 인프라 개발의 중요 계기될 듯

이백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아시아 지역의 사회기반시설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역내 국가들의 경제금융 협력관계 강화를 목적으로 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이 빠르면 올해 말에 공식 출범될 예정이다. 중국의 주도하에 추진되고 있는 AIIB는 지금까지 37개의 아시아 지역 국가와 20개의 비아시아 지역 국가들로 총 57개국이 참여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지난 3월 27일 AIIB에 가입하기로 결정하여 예정창립회원국이 되었으며, 6월 중 설립협정문 협상이 완료되면 국회 비준절차를 거쳐 창립 회원국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AIIB는 세계은행(WB)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 등과 같은 기존 다자은행과 협력하여 부족한 아시아인프라 투자재원을 지원함으로써 아시아의 지속적 성장과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AIIB 가입이 주는 의미

인프라 건설부문에서 AIIB에 한국 가입을 통해 가지는 기대는 두 가지 측면일 것이다. 첫째는 아시아 지역 인프라 건설시장의 확대이다. 아시아개발은행에 의하면, 2020년까지 10년간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개발 총 투자수요는 약 8.2조 달러이며 매년 7,50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기존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등에 의한 실제 투자실적은 절반을 넘지 못하였다. 따라서 AIIB의 운영이 본격화되면 아시아 지역의 건설시장 확대가 예상되며 국내 건설업체들의 사업 수주 기회도 더불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一帶一路: 해상과 육상의 실크로드) 건설 프로젝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중앙아시아권 국가와는 육상의 실크로드경제권 구축 구상, 동남아시아 국가와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공동 건설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일대일로가 통과하는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개발도상국들이 대부분으로서 관련 국가들에 대한 인프라 개발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는 AIIB를 통해 북한을 포함 동북아 지역 인프라 건설사업의 활성화이다. 특히 지경학적으로 남·북·중·러 등이 있는 환동해권은 중국 동북지역과 극동 러시아의 경제협력 및 교역을 위한 주요 관문역할을 하는 지역이다. 중국은 2009년부터 ‘창지투 개발계획’을 중심으로 동북아 지역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고, 나선경제지대와 창지투선도구와의 도로 연결, 나선지대의 공동개발 등 북중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미 극동·시베리아지역의 ‘극동 장기발전전략 2025’를 수립하여 자원개발을 중심으로 동북아에의 영향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북한과 ‘나진-하산 철도’ 연결사업 등 가시적 성과도 보이고 있다. 이들 지역에는 북한의 나선과 청진,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자루비노와 같은 동북아 주요항만들과 중국의 훈춘, 러시아의 우수리스크의 내륙물류기지 건설계획들이 수립되었거나

01 지난 3월 말 열린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인 보아오 포럼 2015년 연차총회의 모습. 이번 총회에서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주요주제로 떠올랐다. ©연합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북한을 제외한 중국, 러시아,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AIIB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동북아 지역의 인프라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북, 국제사회와의 관계 발전 정도 따라 대규모 인프라 개발도 가능

북한은 2013년 11월 13개 경제개발구와 신의주 특구 개발계획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신규로 6곳을 추가 지정하는 등 외자유치를

통한 자국의 경제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인프라 분야에서는 러시아 및 중국과의 개발협력 사업이 나선, 신의주, 평양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중국을 대상으로 접경지역 관광 사업들이 개발되고 있다. 예를 들면 황금평 경제특구 개발, 백두산 국제관광프로젝트, 나선경제무역지대 개발, 나선-하산 철도연결사업 등이다. 지난해와 올해에는 원산금강산 관광특구 개발사업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바도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북한의 인프라 개발 지원은 거의 전무하다. 2009년 이후 국제경제제재와 핵사찰 등으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등에도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AIIB가 이제 창설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AIIB를 통한 북한의 인프라 개발 지원 가능성을 선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AIIB 또한 국제금융기구의 기본원칙을 따를 것이고, 북한이 창립회원국으로도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인프라 개발 지원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AIIB를 포함하여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북한 인프라 개발지원은 ‘북한이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전제조건이 된다. 북한은 장기화된 경제난 해소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외부로부터의 경제지원을 통한 인프라 건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개발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도 대규모의 북한 인프라 개발 사업에 대한 재정 부담과 정치적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AIIB를 포함 국제금융기구들과 연계한 지원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중국의 ‘일대일로’와 ‘동북지역개발전략’, 러시아의 ‘극동 리



신두만강대교 건설현장(2014년 10월 필자 촬영)

시아 발전전략’이 상호 연관성과 시너지 효과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 국제사회에 개혁·개방을 본격화한다면 관련 인프라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AIIB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북한 인프라 개발은 국제협력의 기반조성 단계와 국제협력의 본격화 단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먼저, 국제협력의 기반조성단계로서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는 관련 이해당사국가(한반도와 접해있는 주변 국가-중국, 러시아, 일본 등)들과의 양자 또는 다자간 협력, 또는 국제민간투자회사들이 주체가 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또한 국제금융기구의 일반적인 지원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련국들의 협의에 의한 지원사업도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면 민간참여가 가능한 경제성이 높은 사업(광물자원개발과 연계된 사업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나 타당성 평가 사업, 경제특구 개발 등과 연계된 인프라 개발사업 등이다.

두 번째는 국제협력의 본격화 단계이다. 즉 북한이 국제금융기구(AIIB, ADB, UNDP 등) 가입을 통해 국제협력이 본격화, 활성화되는 것으

로 국제기구 등을 통해 정상적인 투자지원이 가능한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북한의 주요 내륙 도시들을 연계하는 대규모 교통망 확충 사업,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주택, 수자원, 전력 사업 등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국제적인 환경협력 사업 등의 추진도 가능하다.

AIIB 창립 이후 고려

북한 인프라 개발 · 국내 시장 확대 전략 필요

북한과 같이 사회기반시설이 취약한 경우에는 종합적인 개발사업 즉 패키지(Package)형 사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북

한은 전력수급 부족으로 철도나 고속도로를 통한 물류의 정상적인 운송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개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다양한 인프라 개발 사업들을 연계한 패키지형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관점에서는 한반도와 동북아를 잇는 교통망 연계 사업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고 할 것이다. 고려할 수 있는 대상사업으로는 먼저 서해측(경인측)은 서울~평양~신의주 구간의 철도의 개·보수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남한의 고속철도를 개성~신의주 구간으로 확대하여 중국의 고속철도망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 도로는 평양~개성, 신의주~안주 구간의 고속도로 건설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중국은 작년 ‘신압록강대교’를 완공하였고 조만간 단둥~신의주 구간의 도로연계가 현실화될 것으로 해당 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이 긴요하다. 경원·동해측의 경우 철도는 기존의 경원선을 연장하여 청진, 나선에 이르는 동해안축철도망(서울~원산~함흥~김책~청진~나선)의 복선화 및 현대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한반도 동부지역과 중국의 동북3성, 극동 러시아가 연계된다. 나선~하산 구간은 북한의 개방이 본격화될 경우 러시아와의 교역 화물 및 여객수송이 증대될 것이며 TSR을 연계·활용함으로써 한반도와 아시아-유럽 간 국제물류운송의 기반이 될 것이다. 도로는 접경지역인 나선~온성, 나선~하산 접경지역의 국제운송로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중국은 증가하는 북중 간 물류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두만강대교를 건설 중에 있다. 이러한 도로확충은 장래 TSR, TMR

과 연계될 수 있는 복합운송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끝으로 기술지원 사업(Capacity Building)이다. 먼저 ‘북한 인프라 관련 기초정보제공·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제공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 외 전문기술자 양성이 필요하다. 북한 인프라 개발사업 이후에도 이를 운영해야 하는 북한 전문가들의 운영기술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한 많은 비효율과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인프라 개발 사업은 북한의 경제발전을 지원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의 자원과 시장을 동북아와 세계로 확장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즉 중국, 러시아와 연계한 자원공급, 대규모 소비시장 접근도 향상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우리와 북한 간의 극심한 인프라 수준 격차는 한반도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다. 때문에 이러한 격차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통해 북한 인프라를 개발하는 것은 대규모의 개발 사업에 대한 정치적 위험을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래 북한 경제지원을 위한 남한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AIIB의 창설은 아시아 및 동북아 지역의 건설시장 확대와 함께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의 적극적인 전략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

이백진은 일본 히로시마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네덜란드 아인트호벤 공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현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이란 핵 협상 타결과 북핵문제

‘핵 보유’ 딜레마의 북한,
스스로 변화할 기회 조성해줘야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ISSUES & FOCUS

이란 핵 협상이 정치적 시한을 이틀이나 넘긴 지난 4월 2일 밤샘 협상 끝에 타결되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중국·러시아·프랑스·영국에 독일이 더해진 6개국과 이란 간의 다자협상 틀을 통해 이란 핵 프로그램 중단에 관한 정치적 합의안을 도출하게 된 것이다. 서방으로서는 이번 협상 타결이 중동과 국제사회의 최대 불안 요인인 이란의 핵무기 개발 위협을 차단하고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됐다. 이란 역시 1979년 11월 주테헤란 미국대사관 사건 이후 계속된 경제제재에서 벗어나 국제무대에 재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미국도 시급한 중동문제 불씨 중 한 가지를 진화하면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핵 없는 세상으로 노벨상을 선불 받은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앞으로 북핵문제에 더 이상의 진전이 없다면 가장 중요한 외교 업적으로 남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다자협상 틀을 통해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된 데 반하여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으려는 노력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지난 수년간 6자회담은 멈춰 있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는 사라져 버린 듯하다. 그 사이 북한은 두 차례나 추가 핵실험을 했고 이제 경제 핵무력 병진노선을 앞세워 오히려 핵무기 보유를 자랑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스스로 북핵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방향성마저 상실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국제사회는 물론 우리 사회에까지 나타나고 있는 북핵문제에 대한 소외로 인해 북한으로 하여금 조급함과 오만을 부추길 수도 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을 영영 놓쳐 버릴 수도 있다. 이란 핵문제로 쏠린 시선을 이제 북핵문제로 돌려야 할 때이다.



01

이란 핵 협상 타결,
참가국들의 인내심과
노력의 결과

이란의 핵 개발은 이미 1959년 팔레비 국왕 정권 시절 중동지역의 패권을 확보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팔레비 국왕의 실각과 함께 중단되었던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1984년 이스파한(Isfahan) 원자력 연구센터를 개설하고 가스원심분리법 농축 프로그램을 가동함으로써 재개되었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기술개발이 자국 내 화석연료(석유, 천연가스) 고갈에 대비하여 원전연료 용으로 불가피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왔다.

그러나 지난 2002년 이란의 반정부단체인 이란저항국민회의(NCRI : National Council of Resistance of Iran)가 나탄즈(Natanz) 우라늄 농축시설 및 아락(Arak) 중수생산시설 등 IAEA

01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지난 4월 3일 이란 핵 협상 타결과 관련하여 TV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이란 핵 협상 타결에서 강대국들의 신뢰와 의지가 중요했다면 북핵문제는 남과 북의 신뢰와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미신고시설을 폭로하면서 이란 핵문제가 불거지게 되었다. 이란 핵문제가 발생한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EU3(영·불·독)+3(미·러·중)과 IAEA 그리고 UN 안보리라는 3개의 채널을 통해 진행되었다. 10여 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이란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대이란 제재 등으로 인해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갈등이 지속되어 왔고 북핵문제와 더불어 국제사회에 심각한 핵 확산 우려를 불러일으켜 왔다.

다행히 2013년 8월 이란의 중도우파인 로하니 정권의 출범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되었다. 2012년 이후 형식상 변화된 P5+1(독)-이란 간 협상채널을 통해 2013년 11월 합의안을 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협상을 지속해 결국 지난 4월 2일 정치적 타결을 이끌어 낸 것이다. 이번 합의는 수많은 암초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협상 참가국들과 이란이 인내심을 가지고 만남과 대화를 포기하지 않았던 외교적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번 합의로 이란 핵문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주요 쟁점에 대한 서방 요구안과 이란 요구안이 절충된 합의안이 타결되었다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점이 남아 있다. 이란은 모든 과거와 현재의 핵 활동에 대해 사찰을 받게 되었고, 15년간 새로운 농축시설을 지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6월 30일 이후 유엔의 대이란 제재 해제에 이어 미국과 EU 제재가 우선 해제되지만 IAEA 사찰에서 문제가 되거나 합의가 깨지는 경우 제재를 다시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반면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는 10년간 약 6천기까지 줄이도록 되어있지만 일부는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중수로 역시 완전한 경수로 전환이 아닌 플루토늄 생산량을 줄이도록 설계를 변경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앞으로 기술부문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6월 말까지 마련해 최종 협상 시한인 2015년 7월 1일 내 협상을 완전 타결해야 한다.

합의 내용 이행이 이란 핵문제 해결의 성패를 가를 핵심이다. 이번 합의가 실제로 이행된다면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합의 이행이 이란만의 문제나 책임은 아니다. 미국 의회 등 미국 내와 이스라엘 등 주변 이해국가들이 이번 합의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오바마 정부가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북핵 합의 이행 실패가

이란 핵 협상 타결에 주는 역 교훈

합의 이행 차원에서 본다면 오히려 북핵문제가 이란 핵문제에 주는 교훈이 더 크다. 이제까지 북핵 협상에서 합의에 이른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94년 북미 간 제네바 합의가 있었고, 6자회담을 통해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에는 2·13 및 10·3 합의가 있었다. 2012년에는 북미 간 2·29 합의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핵 협상을 통해 얻었던 합의는 현재 더 이상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이유로든 합의를 깨뜨린 북한의 기만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이란 역시 북한처럼 약속을 깨고 핵개발 프로그램을 계속한, 불신과 기만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이란 핵 협상 타결의 미래는 투명하고 철저한 사찰에 달려다고도 할 수 있다. 합의 그 자체만 보면 지정된 장소 외에서도 사찰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찰·감시 체계는 매우 강력하고 긍정

적이다. 이는 북핵 협상에도 중요하다.

그러나 핵 협상 타결도 중요하지만 합의 내용이 지속되려면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네바 합의를 비롯해 지금까지의 합의 이행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여타국가들 역시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다. 결국 합의 이행은 어느 일방이 아닌 쌍방이 함께 이행해야 하며 누구든 합의를 어기면 벌칙이 뒤따르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란 핵 협상 타결이 앞으로 북핵 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불투명하다. 이란 핵문제와 북핵문제가 연관성이 있고 미국의 정책책이라는 큰 틀 안에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나름의 구별되는 환경을 가지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이란 핵문제와 북핵문제는 지역 중심의 특정한 이해관계를 축으로 진행될 것이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가능성은 이란 핵 협상 타결이 북핵문제를 위한 6자회담의 재개를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이란 핵 협상과 같이 북핵 역시 사찰과 함께 어느 정도까지 기존의 핵 프로그램을 용인하느냐의 문제와 제재 해제 시점과 폭이 협상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란이 상당한 핵 인프라를 유지한 상황에서 제재의 우선 해제는 북핵 협상 과정에 부정적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반대의견도 있다.

그러나 실제 6자회담 재개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은 협상에 참가하는 국가들의 동상이몽이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과의 협상에 많은 힘을 소진했고, 앞으로도 이를 마무리하는 데 매진할 것이다. 반면 북한과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회의감에 빠져있고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2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외교적 노력을 시도하고 성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란 핵문제와 북핵문제의 중심에 미국과 함께 이제 중국도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게도 미중관계가 북핵문제와 6자회담 재개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어버렸다. 여기에 일본 아베 정권의 갈등 요인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도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한 요인들이다.

여기에 북한은 이란 핵 협상 타결에 대해 이란이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계속 추구할 것이며 미국 등에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만 전하고 있다. 오히려 미국이 계속 사우디아라비아

와 합동 군사훈련을 벌인다면 이란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북한의 속내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 스스로 변하게 해야

시기적으로 곧바로 6자회담이든 북미 간이든 의미 있는 대화가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 북핵문제가 이란 핵문제보다 우선할 수 있도록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막연히 미국이나 중국, 6자 틀에 의존하기보다 북핵문제에 대한 우리의 역할과 공간을 확장해 나가야 할 때이다. 이란 핵 협상 타결에서 강대국들의 신뢰와 의지가 중요했다면 북핵문제는 남과 북의 신뢰와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과 북핵문제에 대한 우리의 자세이다. 북한은 밖에서 변화시키려 하면 오히려 변하지 않는다. 북한의 변화는 북한 스스로에게 맡겨야 한다. 또한 북핵이 남북 간의 만남과 대화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북한은 앞으로 핵 포기의 딜레마보다 핵 보유의 딜레마가 더욱 심해질 것이란 점에서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해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조성해주고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보증인이 됨을 주저하지 않는다면 북한 스스로가 핵을 내려놓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

김동엽은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군사안보로 북한학 박사 학위를 받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로 근무하였으며 현재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김필건 대한한 의사협회 회장

“민족과 함께 해온 한의학, 통일의 매개체·한반도의 위대한 유산으로 거듭날 것”

“한의학은 우리 민족의 의학입니다. 남과 북이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한민족의 의학인 것입니다. 이런 한 의학을 통해 남북이 교류하고 협력한다면 통일의 매개체 역할은 물론 국제경쟁력을 갖춘 미래의 큰 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의학은 통일의학입니다!”

전국 2만 명 한의사를 대표하여 국내 한의학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필건 대한한 의사협회 회장. 민화협 공동의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그는 남북 간 한의학 교류협력에 다가오는 통일시대의 커다란 자산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오랫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한의학의 위상을 되찾아 국민의 건강을 더욱 세심하게 보살피겠다는 김필건 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인터뷰 박지용·염규현 | 사진 김성현

한 의사들이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더욱 나은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한 의사협회. 협회 최초로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 김필건 회장은 2013년 4월부터 지금까지 한의학의 올바른 위상정립과 한 의학을 통한 더욱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가 단식투쟁까지 불사하며 호소하고자 한 것은 사실 특별한 그 무엇이 아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불합리한 족쇄에 묶여 국민에게 마땅히 제공해야 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100% 발휘하지 못한, 그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자는 것이었다.

“보통 한 의학을 생각하면 침, 뜸, 부항, 보약 등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한 의학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현대 의학입니다. 한 의사는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할 의무가 있는 의료인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한 의계는 수많은 불합리한 제도에 막혀 있습니다. 한의원 치료가 보험적용을 받지 못해 국민들이 한 의의료기관 이용을 부담스러워하고, 다리가 빼어 침을 맞기 위해 한 의원에 왔다가도 골절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양방의원으로 가서 엑스레이 촬영을 한 뒤 한 의원으로 오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약들이 오랫동안 한 의계의 발전을 막아 왔습니다. 때문에 저는 한 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한 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 약제제의 활성화, 한 의학의 세계화 등 한 의학이 현대 의학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불합리한 제도에 묶여 오랫동안 박제화되어 온 한 의학을 다시 살려야 한다는 신념으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는 한 의학이 ‘대한민국 의학’이고, 한 의사는 ‘대한민국 의사’라는 사실을 여러 번 강조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이후 왜곡된 양방중심의 보건의료체계가 아직까지 청산되지 않아 그 피해를 국민들이 받아 왔다는 설명이다. 이미 중국,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 유럽까지 양방의학의 한계를 인식하고 한 의학을 받아들이고 있다. 화학적 약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식물자원 연구를 통해 신약개발과 세계시장 공략에도 나서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의 한 의학은 정작 국내에서는 명맥만 유지할 정도로 힘겨운 상황이다. 현재 200조 원 규모의 전통의학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것은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등이다. 이들과 비교하여 전혀 뒤질 것 없는 우리 한 의학이 정작 불합리한 법과 제도에 묶여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구에서는 뒤늦게 동양의학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나뭇대로 연구를 거듭해 차츰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오랜 전통과 지식을 축적해온 한의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시장 진출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예로 한약제제의 활성화 부분을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액체 상태의 한약, 즉 첩약은 우리들이 먹기에도 쓰고 맛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서구인들이 받아들이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얼마든지 정제, 캡슐 형태 등 다양하게 제조할 수 있습니다. 기술력이 충분합니다. 이런 제형변화가 필요한데, 이를 제도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오히려 천연물 신약이라는 이름으로 한약에 문외한인 양방에서 처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연히 한약재가 들어간 한의신약을 양방에서 처방하고, 정작 한의사들은 만들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런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인정한 한의학, 정작 각종 규제로 명맥 유지만

김필건 회장이 오랫동안 주목하고 노력해 온 부분이 또 하나 있다. 바로 한의학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이다. 민화협 회원단체이기도 한 대한한의사협회는 주요 정책에 ‘한약재 남북한 직교역 확립’, ‘통일을 대비한 한의료제도 모형 구축’, ‘남북민족의학협력사업 활성화’ 등이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관심이 깊다. 아울러 지난 2014년 6월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유라시아 의학센터’를 설립해 한의학의 세계화와 더불어 한의학을 통한 남북 교류협력 가능성을 열기도 했다. 그에게 통일은 무엇일까, 또한 한의학이 통일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을까.

“한민족의 공통분모인 한의학은 대한민국의 발전은 물론 한반도 전체의 번영을 위해, 다가올 통일을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

습니다. 아마도 남북이 할 수 있는 사업 중 우리의 일방적 투자나 지원이 아닌 함께 힘을 모아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바로 한의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각자 전통의학의 장점을 독자적으로 발전시켜왔으며, 이는 나뭇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러시아에 유라시아 의학센터를 세운 것도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남북의 전통의학을 러시아의 서양 의학과 결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한의학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유럽까지 진출하는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아울러 한의학은 민족의 전통의학이기 때문에 민족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남북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통일 후 한의학은 우리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인력 및 한약 자원의 교류를 통해 상호 호혜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꾸준한 준비와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현재 고려의학이라는 이름으로 한의학을 발전시켜오고 있다. 고난의 행군 시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려의학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김필건 회장은 북한의 고려의학 발전과정에서 유독 주목하는 부분이 있다. 어떤 면에선 부러운 부분이기도 하다.

“북한의 고려의학은 기초·임상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즉 현대의료기기와 실험검사를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방과 한의의 장단점을 최대한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한의사가 기초생명과학과 영상진단관련 과목을 양방의대와 똑같이 배우고 있지만, 의료기기 사용에 제한이 있어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북한은 고려의학을 과학화하기 위한 연구를 국가정책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한의연구기관인 고려의학과학원과 전문병원

들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효능이 높은 한약을 많이 개발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반면 우리의 한의학은 연구발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편 그는 북한이 우리에게 비해 한약 자원 및 토지가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현재 황폐해진 북한의 산림복구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순한 산림복구가 아니라 한약재로 사용 가능한 묘목을 지원해 심도록 하고, 이를 나중에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북한으로서도 거부할 이유가 없고, 우리 역시 북한의 산림을 푸르게 함과 동시에 양질의 한약재를 얻을 수 있으니 이익이 된다는 설명이다. DMZ 일대에 남북이 공동으로 한약재 재배지를 조성해 함께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작은 통일이 될 수 있다고 덧붙인다.

남북 ‘통일 한의학’ 세계적 상품 가능성 충분해

김필건 회장은 행복한 통일을 위해선 무조건 남북이 만나고 교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치적 이유로 만남마저 막아버리면, 설사 도둑같이 통일이 온다 해도 큰 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멘의 최근 상황에서도 볼 수 있듯, 통일은 마음과 마음이 먼저 하나 되어야 한다. 정치적 계산과 타협에 의한 통일은 결국 커다란 상처와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김필건 회장은 그런 면에서 한의학이 평화적 통일을 위한 남북의 가장 인 도주의적인 연결고리라고 믿고 있다. 한반도의 오랜 역사가 만들어낸 한의학을 통해 다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것. 아픈 이들을 보듬어주는 한의학의 본분처럼 갈라진 한반도를 다시금 치유하는 것도 한의학의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광복·분단 70년을 맞아 김필건 회장은 일제의 한의학 탄압으로 인해 발생된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한의학이 본래의 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의사=양의사’라는 잘못된 인식이 일제강점기 잔재의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과 그를 바탕으로 한 제도에서의 제한이 그동안 한의학의 발전을 가로막아 왔다는 것이다. 이제 일제의 잔재인 양방중심 의료 체계에서 한·양방 협진을 통해 진정 환자를 위한 의학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가 단식투쟁을 할 때 언론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의 사도 의료기기 사용케 해달라고 단식한다’, ‘밥그릇 싸움이다’라



01 2014년 6월 유라시아 의학센터 MOU 체결식
02 2015년 2월 단식 투쟁 중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방문
03 2015년 1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 기자회견

고요. 아닙니다. 21세기인 지금 동의보감이 쓰여졌던 과거 그 당시대로만 진료하라는, 이런 반문명적 규제를 없애라는 것입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만들어진 장비를 통해 환자를 진단하고 예후를 살펴며 치료하는 것은 양방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의사는 사람을 치유하는 데 순수한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양방과 한방이 서로 협력해 더 나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어떻게 밥그릇 싸움이 될 수 있습니까? 저희는 양방과 대립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다만 병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객관화되고 과학적인 도구를 써서 병을 진단하고 예후를 관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후 한의학적 처방과 치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한민국 의사’ 한의사의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통일을 위한 매개 역할 역시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민족과 함께 해온 한의학,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남북산림협력으로 ‘대화통로’, ‘환경통로’ 만들자

박경석 국립산림과학원 임업연구관



01

01 양강도 해산시의 모습. 나무가 거의 없는
민둥산들이 대부분이다.

02 황해북도 수안군의 경사지 다락밭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산림황폐화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10년 내에 수림화를 달성하기 위해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을 국방위원회 산하로 재편하는 등 산림정책 추진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우리 정부도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자연재해 피해를 방지하여 북한 경제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효성 높은 남북한 산림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진정성 있게 북한 당국을 설득한다면 단단하게 엉켜있는 그린데탕트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린데탕트 실현을 위한 환경통로 개척

2014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통일대박론을 제시하면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한 도발로 야기된 2010년 5·24 조치 이후 중단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재개시키고, 남북대화를 통해 긴장완화를 도모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정부차원에서 시도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시 국정과제로 제시된 ‘그린데탕트를 통한 환경공동체 건설’과 독일 드레스덴에서 제안한 북한지역에 농업, 축산, 산림을 함께 개발하는 ‘복합농촌단지 조성방안’, 2015년도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북한과 함께 통일을 준비해 가는 민생, 환경, 문화 분야의 3가지 통로 개척사업 등이 그러한 노력들이다. 특히 그린데탕트 실현을 위한 환경통로 개척은 비정치적인 환경협력사업을 남북이 함께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남북 간에 형성된 경색 관계와 긴장을 완화시키겠다는 정책적 의도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드레스덴 제안을 흡수통일을 전제한 허무하기 짝이 없는 통일대박론에 바탕을 둔 대결각본이라며 비판하고, 우리 정부가 승인한 남한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을 수용하지 않았다.



02

그래서 평화통일 구축의 해인 2015년에 비정치적인 환경분야 협력을 통한 그린데탕트 실현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렇다면, ‘그린데탕트 실현을 위한 환경통로 개척’을 남북이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 우선 남북이 함께 개척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관심을 갖고 수용할 수 있는 환경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남한 정부의 대북 관계 개선노선에도 부합되는 남북협력사업이어야 한다.

북한의 산림황폐화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북한 주민생활 개선과 북한경제 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8년 국립산림과학원의 인공위성 분석자료에 따르면 북한 산림의 32%, 서울 면적의 30배에 달하는 284만ha가 황폐화되었고, 1999년~2008년 사이에 북한의 산림 황폐지 면적은 7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산림황폐화 실상은 국제적으로도 평가되고 있다. 독일 비정부 환경단체인 ‘저먼워치’는 2013년 국제 기후위험지수 보고서에서 지난 20년간(1992~2011) 북한에서 37건의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하였고, 매년 평균 2건의 자연재해로 국내총생산(GDP)의 8%에 이르는 재산 및 인명피해를 본다면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재난대처 능력이 취약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중국 도문 건너편에 위치한 북한 남양시의 모습



규모가 가장 큰 나라라고 밝히고 있다. 국제조사 기관인 Maplecraft’s는 북한이 산림전용 지수에서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계 3위라고 발표하였다.

이렇게 북한에서 산림이 빠르게 황폐된 것은 북한 당국이 지속적인 경제난으로 식량배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자 북한 주민들이 산지개간을 통해 돼기밭을 조성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허용하였고, 추운 날씨를 견디기 위해 산에 있는 나무를 무분별하게 땔감으로 채취하는 것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가 목재수요를 국내 산림에서 전적으로 충당하고 있고, 외화벌이를 위한 대규모 벌채가 북중 국경지역에서 자행되고 있어 산림훼손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한의 강한 산림복구의지

북한 산림황폐화의 폐해가 더욱 심각한 이유는 기후 변화에 따라 수시로 발생하는 집중폭우 시 산사태와 대량 토사유출로 이어져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하천 범람에 의한 도로유실, 산업기반시설 파괴, 농경지 매몰을 반복적으로 가져와 경제회복을 더디게 한다는 점이다.

이에 북한 경제를 회복시키는 치적을 보여야 하는 김정은 정권도 북한 산림황폐화가 경제회복에 걸림돌이라고 인식하고 정권을 세습한 2012년 4월 발표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올 데 대하여’ 담화에서 10년 안에 수림화를 달성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어 2014~2015년 2년에 걸친 신년사에서 ‘산림복구 전투를 힘 있게 벌리자’며 전당, 전군, 전인민이 황폐산림 복구에 모든 힘을 쏟아 황금산으로 전변시키자고 강조하였다. 다시 2015년 2월 26일 김정은 제1위원장은 당, 군대, 국가경제기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 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를 통해 “모든 사업에서 다 그러하듯이 인민군대는 산림복구 전투에서도 선구자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면서 “인민군대에서는 산림조성 사업과 산림보호 사업을 각급 부대 정치위원들이 직접 책임지고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산림복구 전투에서 군민협동작전을 잘하여 군민대단결의 위력이 높이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최근 북한 소식통에 의하면 김정은의 직접 지시로 대대적인 산림복구전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을 책임진 내각 국토환경보호성 산하 산림총국이 국방위원회 산하로 재편됐으며, ‘조선녹색사업개발협회’가 구성돼 산림녹화를 위한 묘목 및 자재 조달을 위한 대외 창구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 내각은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어 산림복구사업을 힘 있게 벌려나가기 위한 결정’을 채택, 발표했다. 내각 결정은 “산림조성 10년 전망 계획을 현실적 조건에 맞게 구체적으로 세우고 산림복구전투에 필요한 자재, 설비, 자금을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을 통하여 계획화하여 보장하며, 그 실현을 위한 산림복구전투 계획 작성과 인민경제계획 시달 등은 국가계획위원회와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립업성, 농업성을 비롯한 해당 단위들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산림조성 10년 전망계획’의 책임단위인 산림총국이 내각 국토환경보호성에서 국방위원회 산하로 편제됐다는 것은 조선노동당의 국방위원회가 이 사업을 책임지고 강력하게 이끌도록 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이 산림녹화를 위해 북한 주민을 동원한다고 해도 식량난과 에너지난에 의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현 상태에서 주민들이 산림에서의 땔감채취와 돼기밭(소토지)에서의 식량조달을 포기하고 산림복구 전투에 능동적으로 동참하여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더욱 현실적으로 경제난으로 인해 국가 재정능력이 약화된 북한 당국이 자체적으로 대규모의 산림녹화를 단기간에 달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우선, 정경분리 원칙으로 남북산림협력사업 재개해야

이러한 북한 내부사정을 감안하면 남북 간 그린데탕트 실현을 위한 환경통로 개척에 있어서 북한의 수용 가

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가 북한 황폐산림 복구를 위한 남북협력사업이라고 생각된다. 아울러 지구환경 보전 차원에서 국제사회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실현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환경협력 분야이기도 하다. 또한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식량난 해소에 기여하는 인도적 차원의 민생인프라 사업이고, 통일미래 세대에게 푸른 금수강산을 복원하여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미래 투자 사업이기도 하다. 남북산림협력사업은 남북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비정치적인 사업 특성을 갖고 있어 그린데탕트를 열어가는 열쇠로서 닫혀 있는 남북대화의 통로를 여는데도 안성맞춤이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도 산림황폐화의 폐해를 인식하고 스위스를 비롯한 EU국가나 국제 NGO 단체 등 외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경사지 토지관리로서 임농복합경영 방식을 전국에 도입·확산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자연재해 피해를 방지하여 북한 경제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효성 높은 남북 산림협력 방안을 제안한다면 북한 당국도 호응하리라 기대한다. 산림복구사업에 참여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측면에서 식량과 에너지를 제공하면서 산림을 통해 일정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남북산림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진정성 있게 설득한다면 단단하게 엉켜있는 그린데탕트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남북 당국이 정치 군사적 문제에만 얽매이지 말고 민생우선, 정경분리 원칙을 우선하여 미래 세대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한반도 국토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환경 통로’를 함께 열어갔으면 좋겠다. 🌍

박경석은 동국대학교 임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농학박사를 취득했다. 1991년부터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근무하며 산림정책 연구를 수행, 2008년부터 북한임업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축적된 노하우 바탕으로 다양한 협력사업 준비, 남북관계 질적 개선에 기여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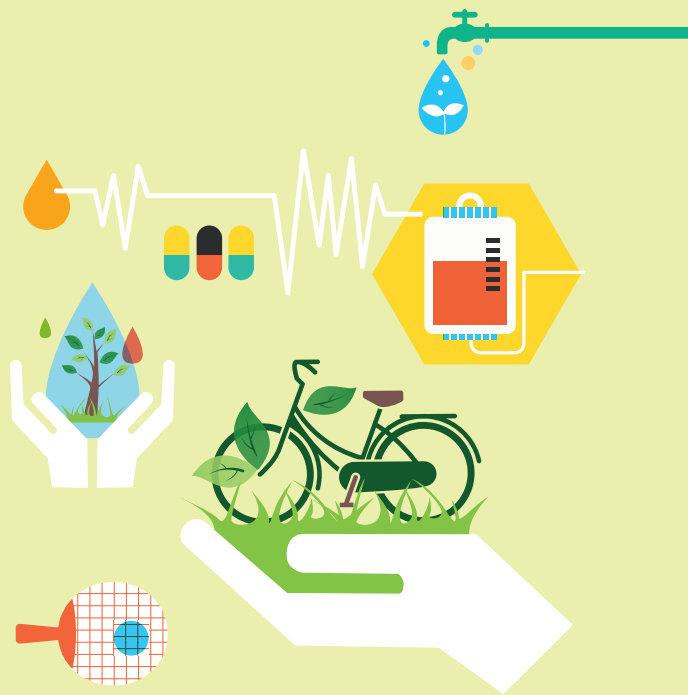
김민서 세계일보 기자

광복 70주년을 맞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남북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실제 성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남북 당국 간 관계 경색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의 교류협력 사업이 관계 개선에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나오지만 성과를 내기는 역시 간단치 않은 현실이다. 지자체 간 중복 사업·과잉 경쟁이 이뤄지지 않도록 중앙 정부와의 조율도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사업 아이디어와 추진 계획은 다양하지만, 실제 이것이 현실화되려면 당국 간 관계 개선 없이는 그 한계가 명확하다.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속적 교류협력이 이뤄져야 하고, 그래야만 질적 관계 개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사업 계획 준비한 지자체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2015년 4월 기준) 통일부에 8·15 광복절 계기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 신청을 한 지자체는 없지만 다방면의 노력을 하는 동향은 감지된다. 서울시를 비롯해 광역 지자체들은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워둔 상태다. 서울시는 통일부에 지자체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주체에 포함하도록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건의하겠다고 시의회에 보고했으며, 필요하면 의원 입법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올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예산으로 55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지난해(49억 2,000

만 원)보다 5억 8,000만 원이 증가한 규모다. 광복절 계기 남북 공동 사업을 염두에 둔 예산 편성인 셈이다. 그간 꾸준히 필요성을 강조해온 경평축구전과 서울시향 평양 공연, 동북아 장애인 탁구대회, 문화재 보존 학술대회 등 사회문화교류사업에 18억 원을 배정했고 서울·평양 간 도시계획 협력분야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에 2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산림 조성과 수질 개선, 평양중앙연구소 의약품 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적 지원사업에는 지난해보다 10억 원이 줄어든 24억 원을 배정했다. 대신 서울시 공단 설립 등 남북경제협력 사



업과 개성공단 근로자 재활용 자전거 지원 사업 등에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다. 광복과 분단 70년 관련 행사와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통일교육에도 7,000만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산하에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지자체 간 공동사업을 발굴하는 안을 건의할 계획이며 경기, 강원 등 접경지역 지자체와 교류협력 사업도 연구할 예정이다.

접경지역 지자체, 교류협력 적극성 돋보여

경기도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전국 광역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 간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지나친 경쟁과 중복사업 투자 등으로 성과가 미비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광복·분단 70년인 올해 1월~2월 개최한 '2015 국제 남녀 유소년(U-15) 축구대회'로 첫 남북 스포츠 교류 물꼬를 튼 경기도는 남북한 간 화해협력과 통일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 북한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지원 등 호혜적 남북협력사업은 물론 민선6기 공약사업인 DMZ세계생태평화공원과 통일경제특구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북한 감귤보내기사업 재개와 함께 제주~북한 간 크루즈관광라인 구축을 중앙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인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감귤 지원 사업은 1998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지속되다가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중단됐다.

각 지자체는 풍부한 교류협력사업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강원도는 산림병해충 방제, 언어치어 공동방류, 자전거 수송·지원 등을, 제주특별자치도는 감귤 및 당근 지원, 울산광역시도 농업용 못자리 비닐 지원, 전라남도도 농기계 수리공장 및 수리부품 지원과 모내기·온실자재, 통일쌀 지원 등의 경험이 있다.

부산광역시는 항생제 공장 건립 및 원료지원사업, 광주광역시도 수해지역 주택 복구 지원 등을 성사한 바 있

다. 일방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사업에서 점차 인적 교류사업과 사회·문화적 또는 경제적 협력 사업으로 확장되는 양상이다. 현재로서는 교류협력이 원활하지 않지만 물꼬가 트이면 좀 더 성숙한 질적 관계 개선을 이룰 수 있는 토양은 마련된 셈이다.

법적·제도적 준비 마쳐, 관계개선 시 다양한 성과 기대

지자체들은 이미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대비한 법적·제도적 준비를 마친 상태다. 물꼬만 트이면 언제든 바로 교류협력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적극적 태도를 보이는 곳이 많다. 남북관계 여건과 환경만 조성된다면 다방면의 교류협력이 추진될 수 있다는 얘기다.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이외에 각 지자체별로 제정한 조례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다.

2014년 기준 16개 광역 지자체와 36개 기초 지자체가 남북교류 관련 조례를 마련하거나 정비했다.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등 총 12개 광역시도가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했다.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방식은 주로 지자체가 민간의 사업 제안을 수용해 예산을 지원하거나 지자체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해 민간과 공동추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남, 전남, 제주도 등은 민간단체가 남북교류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이를 지원하는 형태이다.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 등은 지자체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주도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형식이다.

이렇게 많은 지자체들이 광복 70년을 맞아 각자의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남북교류협력 의지를 밝히고 있다. 모쪼록 한미군사훈련이 종료된 현시점부터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의 불씨가 살아나, 지자체들의 다양한 사업계획들이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민서는 영국 브리스틀대에서 공공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세계일보 외교안보부에서 통일부 출입기자로 재직 중이다.

탈북청년들, 멋진 통일 위해 좌우 날개로 비상하다

탈북청년모임
'위드-유(with-U)'

탈북자 3만 명 시대다. 때론 목숨을 건 선택과 여정을 통해 이 땅에 정착한 이들. 하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남한 국민의 시선은 온전히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최근엔 오히려 부정적 시각이 늘어난 분위기다. 그런데 탈북자를 떠올리면 연상되는 '보수', '반북'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시각으로 다가올 통일시대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젊은이들이 있다. 탈북청년모임 '위드-유(with-U)'이다.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은 '좌우의 날개'로 통일시대의 징검다리가 되겠다는 이들을 만나보았다. **편집부**

01 2014년 8월 15일 '위드-유'는 가수 이승철과 함께 독도를 방문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작은 콘서트를 가졌다.



2011년 8명의 탈북청년이 친목모임을 꾸렸다. 이들 모두 10대 후반에서 20대 초 탈북하여 한국에 정착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에서 대학이나 대학원 교육을 마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도 같았다. 한국 사회에서 각자 살아가는 이야기를 주고받고, 정보를 공유하며 정기적으로 만나던 이들은 또 하나의 공통점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것은 어떤 사명감과는 같은 것이었다. 강원철 기획팀장은 위드-유의 시작은 소박했다고 말한다.

“반년 정도 만나다 보니 마음이 열려 진솔한 대화가 가능했어요. 그러다 통일이 된다면 남과 북 중 어디에 가서 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모두 북한에 돌아가겠다는 답을 했죠. 이유도 같았어요. 우리가 남한에 와서 민주주의 교육도 받고 사회생활을 하며 경험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경험이 통일 후 북한 지역에 작은 도움이나마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었죠. 먼저 북한을 떠났다는 일종의 부채의식도 가지고 있었고요. 무언가 갚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들의 고민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통일이 된 후 다시 북한으로 갔을 때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다시 고향을 찾았을 때 땃땃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작은 것이라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모아졌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탈북청년모임 '위드-유'이다.

“청년답게 젊은 시각으로 통일을 바라보고 준비하자. 우리 탈북청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것을 지금부터 준비하자. 대신 정치적 성격을 갖기보다는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통일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자고 의견을 모았어요. 저희가 남한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평범치 않은 의미가 분명 장점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통일의 주체다!

뜻을 모은 위드-유는 많은 논의와 고민을 거쳐 2013년 후배 탈북청소년을 위한 '마중물 음악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무연고 탈북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준비한 마중물 음악회는 연습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자체 회비로 충당했다. 아울러 음악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전액 무연고 탈북청소년들에게 전달했다. 이는 위드-유가 가지고 있는 원칙을 행동에 옮긴 결과다. '구성원 자체의 힘으로' 그리고 '민주적으로'라는 원칙이다.

물론 큰 행사를 치를 때는 위드-유의 취지에 공감하는 이들의 후원도 받는다. 하지만 일상적인 모임이나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회비로 충당한다. 위드-유의 회장 역시 회원들이 1년 임기로 돌아가며 맡는다. 기존 탈북자 단체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2014년 8월에는 가수 이승철과 함께 독도를 찾아 '홀로 아리랑'을 합창하

며 작은 콘서트를 열어 많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역시 위드-유 회원들이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행동한 것이다.

“최근 대북전단살포나 종편에 출연하는 일부 탈북자들로 인해, 탈북자들이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이미지’가 더 굳어진 것 같아 안타까워요. 사실 그들의 행동이나 발언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 탈북자들도 많거든요. 특히 저희와 같은 젊은 세대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탈북자라고 하면 무조건 보수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반감과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위드-유는 보수나 진보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가지고 있어요. 진정 모두가 행복한 통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좌우의 날개로 함께 날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7월 준비하는 ‘통일세대를 위한 대한민국 현대사 강좌’도 같은 취지로 준비하고 있고요.”

위드-유가 준비하고 있는 현대사 강좌는 탈북청년들이 좌우 이념갈등을 극복하고 균형 잡힌 역사관을 갖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의 리더십과 인생역정에 대한 강의로 진행된다. 강사진도 충실히 꾸렸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류석춘 원장, 박정희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정부 초대 경제 제2수석비서관을 지낸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김대중 총재 비서실장을 지낸 유재건 CGN 대표이사를 섭외했다. 모두들 초청이 쉽지 않은 인사들이지만, 위드-유의 취지에 공감해 선뜻 강연을 수락했다고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 등을 초청할 예정이다.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평가는 제각각일 수 있어요. 하지만 보수와 진보를 떠나 이분들 모두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분들이고, 그분들의 삶과 리더십을 통해 분명 저희가 배울 점이 있다고 믿습니다. 좌우 이념을 넘어 한국의 현대사를 있는 그대로 균형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 현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탈북청년에겐 반드시 필요하

다고 생각했어요. 아울러 어쩌면 탈북청년들이기에 기획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란 생각도 들었고요.”

한국 현대사 강좌 통해 균형 잡힌 역사관 심어주고파

현대사 강좌를 앞두고 위드-유는 또 하나의 작지만 의미 있는 행동을 이어갔다. 바로 네 명의 전직 대통령의 묘소를 방문해 참배한 것이다. 지난 3월 7일 국립현충원을 찾아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했고, 21일에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참배했다. 탈북자 단체가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남한 사회에서 탈북자들이 가지고 있는 평범하지만은 않은 위치랄까요, 그런 것을 생각해봤을 때 남한 사회 내의 좌우 이념갈등, 또는 지역감정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영호남 출신도 아니고, 또 좌우로 나누어 갈등할 이유도 없으니까요. 저희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해서도 의견을 낼 수 있고, 북한인권에 대해서도 저희 나름대로의 생각을 밝힐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봉하마을을 찾은 겁니다. 탈북자 사회 내에서 봉하마을을 찾는 것이 일종의 금기 아닌 금기로 된 분위기가 있었기에 쉽지만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곳을 찾은 탈북청년들이 느낀 점도 분명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일의 틀러리가 아닌 당당한 주체로서 행동하고 실천해야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었어요.”

사실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탈북청년들의 마음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찾아온 남한 사회에서, 원만히 정착해 잘 살아가야 한다는 마음이 앞선다. 그래서 통일, 남북문제에 대해 조금씩 관심이 멀어지기도 한다. 이들도 남한의 청년들과 같이 취업, 결혼, 사회생활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하는 고달픈 청춘들이기 때문이다. 분단이 가져온 고통과 아픔을 온몸으로 체험한 이들이지만, 때때로 통일이, 남북화해가 벽치게 다가오기도 한다.

위드-유 구성원들은 바로 그 점이 안타까웠다. 누구보다 통일에 대한 염원과 의지가 강한 탈북청년들인데



‘위드-유’는 지난 3월 탈북자 단체로는 최초로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말이다. 때문에 위드-유의 활동을 통해 통일에 대한 사명감, 의지를 간직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통일의 '마중물'로 당당히 나아갈 것

오랜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을 바라보는 이들의 심정은 복잡하다. 우리 정부의 통일대박,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정작 실질적인 교류나 성과로 이어지지 못해 안타깝기도 하다. 북한이 최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모습도 고무적이다. 비록 평양을 중심으로 한 제한적인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분명 지금의 변화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강원철 팀장의 생각이다.

“신뢰는 서로 쌓아야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한 쪽에서 신뢰를 말해도 상대방이 호응하지 않으면 소용없죠. 전 한국 정부가 보다 넓은 마음으로 북한에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북한 당국이 비

록 부정적으로 나온다고 해도, 이에 같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신뢰를 함께 쌓는다는 마음으로 전향적인 접근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남한 정부가 북한 당국과 똑같이 대결국면으로 나간다면, 결국 북한 주민들의 신뢰도 잃어버리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 국민들 중 누구보다 남북의 화해와 평화 그리고 통일을 바라고 있는 이들이 바로 탈북자들이지 않을까. 분단의 고통을 온몸으로 체험한 이들이기에 평화와 화해 그리고 통일의 소중함을 더 절감할지 모른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갈등과 증오를 넘어 화해와 평화를 위해 작은 힘을 모으겠다는 위드-유. 이들의 작지만 의미 있는 행보는 앞으로도 이어질 예정이다. 그 어디에도 휩쓸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나아갈겠다는 이들의 당당한 발걸음을 기대해 본다. 🌈



북한의 빠른 변화, ‘객관적 눈’으로 전달하는 통일 길라잡이

심은진 연합뉴스TV “북한은 오늘” 담당 PD
김혜미 작가



“북한은 오늘”은 2011년 12월 연합뉴스TV 개국과 함께 탄생한 국내 최초 북한 전문 데일리 방송이다. 가장 가깝지만 심리적 거리는 가장 먼 나라 북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통일 한반도를 이룩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야심 차게 출발했다.

2011년 12월 19일 낮 12시, 북한의 대표 아나운서 리춘희가 검은색 한복을 입고 화면 앞에 등장했다. 그녀는 슬픔에 가득 찬 표정과 목소리로 말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17일 현지지도의 길에서 급병으로 사망하셨다는 사실을 비통한 심정으로 전합니다”라고. 그녀의 입을 통해 김일성 주석 이후 북한을 통치했던 은둔의 지도자 김정일의 사망이 공식화된 것이다. 연합뉴스에는 24시간 조선중앙TV와 북한 라디오를 예의주시하고 분석하는 모니터실이 있다. 사실 연합뉴스 모니터실에서는 김정일 사망 몇 달 전부터

김정일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이상 징후를 감지했다. 그리고 연합뉴스 북한부 기자들은 김정일 사망 기사 준비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모니터실 사람들의 동물적 감각과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 매의 눈이 빛나던 순간이었다.

북한의 시계는 빠르게 가고 있다

2011년 겨울, 국내 모든 채널은 후계자 김정일의 행보에 기대 반 우려 반의 시선을 보내면서 북한 체제의 운명을 논했다. “북한은 오늘”은 침착하게 북한으로부터 생산되는 소식을 장용훈 연합뉴스 북한전문기자 등 여러 기자와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발 빠르게 전했다. 이후 북한의 2인자 장성택 처형 등 굵직굵직한 사건 속에서 미약하지만 국내 최초 북한 전문 데일리 뉴스 프로로서 명성을 높여가고 있다.

북한의 시계는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이후 빨라진 듯하다. 극도의 빈곤은 주민들에게 생존법을 터득하게 했고 이젠 돈 되는 것이면 뭐든 장마당에 판다고 한다. 장마당에서 장사 한 번 안 해본 탈북자가 없을 정도로 그 범위는 어마어마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TV

도 달라졌다. 올해 초부터 TV와 라디오 방송을 고화질(HD)로 전환했다. 더불어 단조롭기만 했던 조선중앙TV 그래픽도 과거와 달리 세련됨을 뽐냈다. 또 가상 스튜디오를 만드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이 포착됐다. 전에 못 보던 30대 안팎의 아나운서가 등장해 신선함을 피웠다. 북한 방송에 부는 변화의 바람은 주민들의 달라진 눈높이를 느끼게 한다. 한층 성숙한 주민의 눈높이를 맞추려는 듯 유익한 정보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것은 물론, 체제선전 내용만 담고 있던 드라마에도 축구 등 다양한 소재를 접목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이런 노력에도 정작 조선중앙TV를 보는 주민들은 별로 없다고 한다. 남한방송이나 중국방송을 몰래 보는 가정이 많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다수는 아니지만 일부 변화에 민감한 북한 주민들의 눈은 한류로 향했다. 장마당과 북중접경지역을 통해 유입된 한류는 북한 주민들의 옷차림, 말투 등도 바꾸어 놓았다. 북한에서 포착된 사진 속에서는 남한 여성들처럼 킬힐에 짧은 치마와 세련된 헤어스타일로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여성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뜯구름 잡지 않는 방송이 되려면

그런데 과연 북한은 진정으로 변하고 있는 걸까. 외형은 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살은 아직까지는 김씨 왕조 국가임이 확실해 보인다. 지난해 인천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북한 선수들의 소감을 보면 알 수 있다. 모든 북한 선수들의 소감은 김정은으로 마무리하는 ‘기승전 김정은’으로 끝났다.

북한의 시계가 빠르게 가고 있는 만큼 “북한은 오늘” 제작진의 시계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매일 북한에서 속속들이 보내져 오는 사진과 영상에서 조그만 변화를 찾아내 시청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전문가와의 대담뿐만 아니라 조선중앙TV를 통해 들어온 북한의 영상을 매일 점검하면서 시청자에게 흥미롭게 전해줄 수 있을 만한 아이템을 선정해 7분 정도의 VCR을 선보인다. 이른바 ‘북한 돋보기’. 여기에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문화가 담겨진다. “북한은 오늘”의 백미, ‘평양 파파라치’도 빼놓을 수 없다. 그날 북한에서 들어온 사진을 통해 북한의 현 상황을 들여다보는 코너로써 김정은의 파파라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청자들은 ‘평양 파파라치’를 통해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할 수 있다. 평양뿐



아니라 지방의 소식을 전달하는 ‘북녘에서 온 소식’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북한 지방의 이름난 기업소와 문화재, 음식 등을 소개하면서 탈북자에게는 고향의 향수를, 일반 시청자에게는 북한의 속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미확인된 북한 이야기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다. 철옹성 같았던 북한의 장벽이 미디어 앞에 조금씩 무너지는 것일까. 하지만 가볼 수 없듯 확인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다. 온갖 설에 관해 확인해볼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 소식을 다룬다는 건 위험 부담이 있는 일이다. “북한은 오늘” 제작진에게는 시청자에게 북한에 대한 혐오감도, 허황된 희망을 심어줘서도 안 된다는 무거운 책무가 따른다. 북한 소식을 시청자에게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출연자 선정부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잘못된 정보 제공은 통일을 이뤄나가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통일은 도둑처럼 온다고 한다. 도둑처럼 우리 곁에 올 통일의 그 현장에 “북한은 오늘”이 함께 할 것이다. 🌐

심은진은 종합편성 채널 MBN에서 6년간 근무했고, 현재 연합뉴스TV-“북한은 오늘” 담당 PD로 일하고 있다.

김혜미는 MBN 시사프로 “뉴스광장”, 연합뉴스TV-“뉴스 1번지”에서 작가로 일했으며 현재 연합뉴스TV-“북한은 오늘” 작가를 맡고 있다.

소설로 바라보는 남북의 서로 다른



뿌리 이야기

오테호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2015년 4월 현재, 북한은 3대 세습을 완료하며 김정은 체제로 안착하고 있다. 김정은이 ‘조선노동당 제1비서’ 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추대된 2012년 4월, 『조선문학』 ‘론설’에서는 ‘김일성 민족’과 ‘김정일 조선’에 이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당위성이 강조된다. 특히 “백두의 성스러운 혈통”의 계승이라는 김일성 가계(家系)의 강조 속에 ‘김정은 시대’의 레토릭으로서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 김정은 영도’를 전면에 내세운다.

2012년 이래로 ‘김정일 애국주의’에 대한 강조는 김일성 가계를 형상화하는 ‘수령형상문학’이 김정은 시대에 문학의 핵심적 의제임을 보여준다. ‘김정일 애국주의’는 김정일에 대한 애도와 헌사에서 비롯되지만, 김정일의 후계자로서 김정은의 미미한 지도력을 상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1994년 김일성 사후 ‘고난의 행군’ 시기에 김일성주의가 강조되었듯, 2011년 김정일 사후에

도 김정은 시대의 체제 결속을 위해 ‘김정일 애국주의’가 재삼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조선문학』 2012년 12월호에 이르면 ‘김일성의 교시’나 ‘김정일의 지적’에 이어 ‘김정은 원수의 말씀’이 ‘불멸의 승리와 영광’을 가져올 유일무이한 권력의 지침으로 강조된다.

‘김정일 애국주의’와 김정은의 사랑

‘김정일 애국주의’는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헌신한 지도자의 형상을 애국자의 전형으로 포착한다. ‘김정일의 유지’를 이어받아 ‘선군(先軍 개발) 담론과 경제 발전’이라는 병진 노선을 통해 체제를 유지하려는 김정은 시대의 전략적 담론이다. 최종하의 단편 「깊은 뿌리」(『조선문학』, 2012. 1)에서는 강성국가 건설을 진두지휘하면서 전기난방 문제 등의 인민생활을 고민하는 김정은의 형상이 그려진다. 부관인 조성국은 김정일을 “군민대단결의 화원”을 가꾸는 “위대한 원예사”로

칭송하면서, “장군님의 손길 따라 인민이라는 비옥한 토양 속에 뿌리내리고 거목으로 자라난 우리 군대는 그 어떤 광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다. 인민의 군대가 체제의 뿌리임을 강조하면서 ‘김일성 민족’과 ‘김정일 조선’을 가능케 하는 ‘위대한 원예사’로서 김정일의 지도자적 품성이 그려진 것이다.

김하늘의 「영원한 품」(『조선문학』, 2012. 3)은 김정일의 사망과 김정은의 지도를 연결하면서 김정은의 사랑과 헌신을 담아낸 최초의 단편소설이다. 이 소설은 ‘김정일의 급서’ 속에서 ‘김정일의 생전 지시’의 관철을 지도하는 ‘김정은의 가르침’을 공유하며,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일체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된다. 주인공은 김정일의 서거를 접하며 비통한 눈물을 흘리지만, ‘김정은의 사랑’이 ‘변함없는 어머니’처럼 김정일의 사망 자리를 메우고 있음에 감사해 한다. 특히 김정일의 사망 이후 ‘호상’을 서고 있는 인민들에게 ‘맹물’이 아니라 ‘사탕가루와 꿀물’을 챙겨주는 김정은의 세심하고 자상한 배려가 이 작품의 핵심적 종자로 드러난다.

뿌리 뽑힌 현대인들의 ‘존재론적 뿌리’ 찾기

한편 2015년 이상문학상 대상 수상작인 김숨의 중편 「뿌리 이야기」는 산업화 시대 이래로 존재론적 뿌리를 상실해가는 현대인의 불안 심리를 묘사한다. 이 작품은 ‘옆으로 뻗어가는 천근성 뿌리’와 ‘땅속으로 깊이 뿌리박히는 심근성 뿌리’의 대비를 통해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한다. 북한 문학의 핵심적 뿌리가 수령형상문학으로서 ‘김일성 가계의 형상화’에 있다면, 이 작품은 남한 문학의 뿌리가 ‘존재론적 개인들의 탐색’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작품은 나무 뿌리의 이야기와 인간의 ‘삶의 뿌리’ 이야기를 중첩하면서 존재의 기원에 대해 탐색한다. 여행사 직원인 화자는 애인인 화가 ‘그’가 5년 전부터 ‘나무의 뿌리’를 오브제로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본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 ‘중군위안부’였던 고모할머니의 손을 떠올리면서 존재의 뿌리를 탐색하는 내용이

덧붙여진다. 심근성 나무에 가까운 화자는 조화와 공존을 위해 ‘그’가 천근성 나무쪽에 가깝기를 바라지만, 둘의 관계는 ‘심근성 식물 관계’처럼 서로를 도태시키거나 ‘천근성 식물 관계’처럼 서로를 말려 죽이는 관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된다. 화자는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라는 존재 이유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자신의 존재론적 기원과 의미를 탐색한다. 결국 모든 존재자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존재의 뿌리를 탐색하는 개별성과 고유성을 지닌 존재임이 드러난다.

심근성 남한 소설, 천근성 북한 소설

남한 문학이 개인의 상처에 공감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면, 북한 문학은 체제의 공식 담론을 인준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남한 문학이 창작자 개인의 감각적 개성과 문학적 새로움을 중시한다면, 북한 문학은 ‘주체문학론’이라는 담론 속에 수령 가계의 형상이나 공산주의적 인간의 전형을 중시한다.

남한 문학은 질문하고 탐색한다. 반면에 북한 문학은 답변하고 가르친다. 남한 문학은 뿌리 뽑힌 현대인의 ‘존재의 뿌리’를 응시하며 인생을 성찰한다. 반면에 북한 문학은 질문하지 않는다. 아니, 개인적 질문이 없는 채로 사회적 답변만을 강요한다. 아니다. 모든 존재론적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등식 속에 ‘김일성 수령의 가계’라는 체제의 뿌리로 환원한다. 그러므로 남한 문학은 존재의 뿌리에 대해 자유로운 상상력을 발산하고, 북한 문학은 체제의 뿌리로 문학적 상상력을 경직되게 수렴한다. 광복 70년인 2015년 현재, ‘심근성 뿌리 같은 남한 소설’과 ‘천근성 뿌리 같은 북한 소설’은 존재태가 서로 다른 문학적 뿌리의 양상을 마주하고 있다. 🌐

오테호는 2000년 9월부터 경희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했다. 2004년 경희대학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2011년 조선일보 신춘문에 문학평론에 당선되었다. 평론집으로 「오래된 서사」, 「여백의 시학」, 「환상통을 읽다」 등이 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에 재직 중이다.

찬란한 역사의 숨결이 흐르는 그곳에 가다

고구려 유적지 여행

기원전 1세기부터 약 700년 동안 지금의 중국 북동부와

한반도 북부 지방의 광활한 영토를 지배했던 역동적인 나라, 고구려.

만약 통일이 된다면, 역사책으로만 보던 고구려를 직접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평양은 고구려의 수도로 약 275년간 있었기에 고구려 관련 유물과 유적이 많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기도 한 고구려 유적지로 수학여행을 떠나보자.

한희진 자유기고가 | 국립문화재연구소 사진제공

-

미리 만나는 통일 풍경은 통일이 되었다는 가정하에 북한의 의식주와 문화 등을 미리 경험해 보는 즐거운 상상글입니다.



01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고구려 고분

고구려 고분은 돌로 쌓아 만든 돌무지무덤과 흙을 덮은 봉토무덤으로 나뉘는데 압록강과 대동강 유역에 분포되어 있다. 1300년 동안 기억 저편에 파묻혀 있던 고분은 무덤 내부 벽화의 아름다움과 뛰어난 건축 기술, 잘 복원된 고구려 문화 등이 근거가 되어 2004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고구려 고분은 평양, 남포시, 평안남도, 황해남도 233ha에 달하는 면적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데 고분을 중심으로 고구려의 찬란한 역사 흔적을 따라가 보자.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나 자료가 많이 남아 있지 않는 현재, 고구려 고분군은 고구려인들의 기질과 기상, 미의식, 생활모습, 종교관 등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어 역사·문화 자료로서 높은 가치를 지닌다. 고분벽화에는 당시의 관습을 포함하여 귀족과 평민의 복식·음악·춤·종교적 신념·천문학 등 다양한 내용들이 묘사되어 있다. 또한 고분건축을 통하여 당시의 매장풍습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건축 기술도 파악할 수 있다.

물리적·수학적 계산과 정교하고 섬세한 건축법을 엿볼 수 있는 동명왕릉원구역내 제7호분으로 발걸음을 돌려보자. 천장은 6단의 평행고임과 2단의 삼각고임으로 이루어져 천장부의 높이는 무덤칸 전체 높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천장고임들은 위로 올라가면서 그 높이와 폭을 점차적으로 줄여 삼각고임부에서 급격히 좁아지면서 깊어졌다. 이러한 고임의 형태와 높이의 변화는 천장 전체를 더욱 높고 깊어 보이게 하는 시각적 효과를 준다.

흙 한 줌에도 돌부리 하나에도 시간을 머금다

수천 년 전 고구려 사람들은 왜 무덤 안에 살던 집을 그렸을까? 연꽃은 무슨 의미였을까? 이와 같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평강공주와 온달장군의 전설이 서린 곳, 진파리 4호 무덤으로 향한다. 6세기 전반기의 고구려 벽화고분으로 사신도가 그려져 있는 외칸무덤이다. 무덤 안길과 안칸에는 판돌에 회로 미장을 하고 그 위에 벽화를 그렸다. 안칸 네 벽의 하부에는 사신도를, 윗부분에는 해와 달, 신선을 그렸다. 신선도는 용이나 봉황새를 타고 금분과 채색으로 현란하게 장식된 꽃과 구름으로 가득 찬 신비로운 세계로 날아가는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안칸 천장에는 고임돌에 연꽃무늬, 병풍무늬를 그렸고, 막음돌에 91개의 별을 그렸다. 시조왕릉 구역 안에 있으며 호화로운 벽화로 장식되어 있어 무덤의 주인을 고구려 왕족의 여자, 평원왕의 공주와 남편인 온달장군의 합장묘로 추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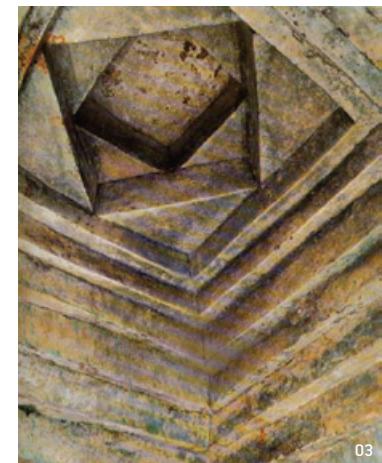
잠들어 있던 벽화를 충분히 둘러봤다면, 고구려 사지로서 가장 규모가 크고 좋은 상태로 남아있는 정릉사지에 둘러 사색의 시간을 가져도 좋다. 따스한 햇볕이 내려앉은 법당문 앞에 앉아 차분한 마음으로 정릉사 8각 7층 석탑을 바라보는 건 어떨까.



04



02



03

01 덕흥리벽화무덤 앞칸 남쪽천장 '부귀'

02 동명왕릉원구역7호무덤

03 동명왕릉원구역7호무덤 안칸 천장

04 평양특별시 용산리에 있는 정릉사 8각 7층 석탑



물론 단체사진도 잊지 말아야겠다. 동명왕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동명왕릉을 옮겨올 때 함께 지은 정릉사 안뜰에는 8각 7층 석탑을 중심으로 세 개의 금당이 배치되어 있는데 고구려 고유의 절 건축 양식을 간직하고 있어 선조들의 숨씨를 엿볼 수 있다. 수천 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떠난 듯 유물과 나 사이의 시공간이 비틀어져 있는 지금 이 시간, 옛 선조들이 이야기를 건네는 듯하다. 📺

러시아 유학생이 본 한반도 통일의 과제

이휘성(Fyodor Tertitskiy)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유학생



나는 러시아인으로 모스크바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지만, 중학교 때부터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 대학 학부 시절 한국어를 전공했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 대한민국 정부의 장학금을 받아 한국에 와서 본격적으로 북한과 남북 통일문제를 공부하고 있다. 북한 화교를 주제로 석사 논문을 썼고, 지금은 북한 군대의 편제와 군인 생활에 대해 연구 중이다. 앞으로 졸업하게 되면 러시아에 돌아가는 것보다는 한국에 남아, 한반도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고 싶다. 나는 한민족의 구성원이 아니다. 하지만 그 점이 한반도 통일 문제를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한다. 아울러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여기에 살 것을 결정한 지금은 한국 문제에 대해 당연히 큰 관심이 있다.

한국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당연히 통일 문제일 것이다. 통일 문제를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통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나’와 ‘통일 이후 어떤 정책을 실행하면 좋은가’이다. 우선적으로 나는 지금 남북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은 불가능한 방식이라고 본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북한에 남한 주민들이 자

유롭게 오가는 것, 남한식 다당제를 도입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물론 남한 사람들도 한국에서 북한식 독재체제를 세우는 것을 원치 않는다. 1972년 남북의 첫 공동선언 때부터 지금까지 남북공동의 권력기관이 설립되지 않는 것을 이 사실의 증거로 볼 수 있다. 유일하게 가능한 통일 방식은 흡수통일의 모습일 것이다. 아울러 전쟁을 통한 통일의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자각하여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

북한을 어떻게 깨안을 것인가

북한 정권은 두 가지를 통해 주민들을 통제한다. 선전과 탄압이다. 우리는 북한 외부에 있기에 북한 정권의 탄압 정책에 항의할 수 없지만, 선전에 반대할 수는 있다. 외부에서 다양한



정보가 유입되면 선전의 효과도 줄어들 것이다. 북한에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 중 제일 효과적인 것은 라디오 등 방송이라고 본다. 북한 당국이 전파를 멈출 수 없고, 방해하기도 쉽지 않다. 탈북자 조사에 의하면 남한 라디오를 듣는 사람들이 비교적 많다고 한다. 또 하나의 방법은 ‘남북 협력’이다. 개성공단, 금강산 및 개성 관광 등 프로젝트 덕분에 북한 주민은 남한 사람이 ‘괴뢰역적 패당 하에 고생하고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우러러 모시는 남조선 주민’이 아님을 분명히 느낄 수 있다. 특히 북한 주민이 남한을 방문할 수 있으면 좋겠다. 물론 북한은 엘리트들만 남쪽에 보냈지만, 북한을 바꿀 수 있는 세력은 바로 엘리트이기 때문에 이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김정은 정권이 개혁정책을 실행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개혁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과 의식 수준을 높여 스스로 변화하는 날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의 날이 되면 한반도에 기쁨이 넘칠 것이다. 가족들과 다시 만난 이산가족과 탈북민, 군사분계선을 제한 없이 오가는 남북 주민. 이런 통일 분위기를 모든 이들이 느끼고 기억할 것이다.

하지만 통일은 역사의 종말이 아니다.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에 존재하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남북통일은 남한 정부와 국민들에게 많은 역할을 요구할 것이다. 거의 모든 면에서 남한에 뒤지고 있는 북한, 이러한 남북의 격차를 해소하기는 분명 쉽지 않은 과제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부담감으로 통일을 두려워하거나 귀찮게 생각하면 안 된다. 통일의 꿈을 포기할 수 없다. 그 보다는 남북의 역사를 다시 한 번 제대로 살피고, 과거의 실수와 범죄를 반복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모든 사회악은 원천이 있다. 바로 차별이다.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을 절대 차별하면 안 된다. 그들을 동등한 주체로 안지 못하면 통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남북 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한 통일을 이루자

또 하나의 문제는 지역주의다. 남한의 충청 때 경상남도의 우파 지지율이 80% 이상이고, 전라남도의 좌파 지지율이 80% 이상인 것을 보면 한국에서 지역주의가 아직까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통일 이후 행정구역으로 ‘북한 지역’을 만드는 것, 또한 북한을 통제하기 위해 정치 기관을 세우는 것은 실수

라고 생각한다. 다음 문제는 복지 문제다. 북한 사람들에게 맞는 복지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불평등과 차별을 느껴 남한 사람들을 미워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렇다고 북한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복지 혜택을 준다면 역으로 남한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것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행히 위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나 알고 있는 문서가 있다. 바로 대한민국 헌법이다. 헌법에 따라 북한 사람들은 지금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이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남한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복지 혜택이 필요한 남북 모든 이들에게 정책을 실행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통일 한국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제안하고 싶다. 통일 한국의 수도를 평양이 아닌 북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 사람들이 지배자가 아니고 형제인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나는 제일 올바른 선택은 개성이라고 생각한다. 북한 주민 중 한국을 제일 잘 알고 있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이 개성 주민이다. 또한 개성시는 서울과 평양 사이에 위치하고, 한국 역사상 첫 통일 국가인 고려의 수도이다. 아울러 남북 협력의 상징이다. 이 도시는 통일 한국의 수도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통일은 쉬운 것이 아니다. 하지만 통일을 이룩하면 우리는 더 번영하고 훌륭한 통일 한국을 만들 수 있다. 우리 모두 손을 잡고 분단의 벽을 넘도록 노력하자. 

이휘성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태어나 러시아국립인민대학교를 졸업했고 2011년에 한국에 와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우리 하나 되어 통일의 문을 열자

임상은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졸업



누군가에게 나의 의식과 마음을 연다는 것은 참 커다란 일이다. 그동안 주위에 늘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던 것들에 눈이 뜨이고,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니 말이다. 지난 2월 겨울의 끝자락에 다녀왔던 어느 북한 토크모임에서 나는 통일문제를 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었다. 평일 저녁시간, 최근 북한 동향과 통일에 대해 탈북민과 청중 간의 자유 질의응답 형식으로 이뤄진 소규모의 답소는 적극적인 참여 속에 단란하고 알차게 이뤄졌다.

북한의 시장발달 상황, 사상 주입 정도의 변화, 탈북민과 북한 주민 간 통신수단에 대한 정보도 유익했으나, 내게 다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한 소년이 탈북을 위해 눈보라 속에서 얼어 붙은 두만강을 건너는 애니메이션 영상이었다. 떠난 엄마를 찾기 위해 도강을 결심하고, 강 바로 옆 수풀언덕에서 기회를 보다가 목숨을 건 긴장 속에 있는 힘을 다해 앞만 보고 내달리는 숨 막

히는 장면. 두만강의 강폭은 3~4m밖에 되지 않아 바로 코앞이 중국인데, 그 몇 초 사이에 자유와 죽음이 갈리는 것이다. 어린 아이가 혼자 얼마나 외롭고 가슴 졸이며 무서웠을까 하는 생각에 울컥했다. 소년의 용기에 숙연해지는 한편, 맘껏 웃고 놀며 자라야 할 시기에 그러한 절박함을 안을 수밖에 없는 분단현실이 안타까웠고,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는 데 일조하고 싶었다. 통일의 필요성을 마음으로부터 느끼게 된 자리였다.

청년 통일운동의 중요성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어린 시절 나에게 북한은 의식 밖의 곳이었다. 평범한 남한 환경의 일상에서는 북한에 따로 연고도 없는 이상 가족이나 친구들과 관련 이야기를 할 일이 없었다. 국사시험을 위해 교과서 속 내용을 암기할 뿐 곧 잊혀진다. 이산가족상봉이나 대사관 진입을 위한 탈북민들의 처절한 몸부림을 TV에서 접한 후에야 인식이 조금 바뀌었다. 그러나 대학에서 국제학을 공부하며 만난 북한은 독재체제, 핵무기, 인권유린과 같은 부정적 모습, 국제사회에서 정책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의 대상이었다. 같은 한민족이라는 동질성, 분단의 원인, 통일의 필요성이나 비전과 같은 통일의식이 성장기에 특별히 교육되지 않은 오늘의 보통 청년세대가 북한이나 통일문제에 이질감을 느끼기 쉬운 배경이다.

그런 점에서 청년 통일운동은 중요한 가치가 있다. 통일시대를 직접 맞이하고 기반을 닦아갈 주역인 청년들이 스스로 통일문제에 가깝게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데, 토크모임과 같은 장을 통해 북한의 다양한 모습들을 이해하고 탈북민과의 교류를 통해 사람의 사연이 오고 갈 수 있다. 이러한 교감은 통일을 머리를 넘어 가슴으로 인식하게 하여 진실한 의지를 만든다. 미래를 설계하는데 올바른 역사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다, 그 미래를 실현하는데 난관을 극복하고 추동력을 내도록 하는 것은 마음이 부르는 바람일 것이다. 북한주민이나 탈북민들의 실상, 이미 진행 중인 작은 통일 한반도의 모습에 대해 알면 알수록 이제 갓 시작된 나의 관심을 표현하기가 조심스럽지만, 이런 시작을 통해 우리 하나하나가 통일한반도를 내 친구의 미래, 나의 미래로 인식하여 마음들이 연결될 수 있을 것이며 청년운동은 이 과정에서 단계별 열쇠가 되는 것이다.

광범위한 홍보 필요

청년들이 참여하는 통일운동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통일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남북청소년교류연맹,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등 기관·단체나 대학, 종교단체에서도 남북의 젊은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유명 가수들이 노래를 통해 통일의식을 국내외에 고취시키는 캠페인도 눈에 띄었다. 무거운 정치에서 벗어나 즐겁고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활동들이 반가운 한편, 이 분야에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더욱 대중적이고 광범위한 홍보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직 통일운동에는 관련 전공자나 탈북민 간의 활동, 남한 속 또 다른 북한과 같은 이미지가 있어 남한 사회로 깊이 들어가 범국민적 캠페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행해지는 통일운동이 민간차원을 넘어 국가정책으로 더욱 연결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청년들의 노력이 경색된 정치상황을 극복하고 정책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기성세대에 대해 독립성과 주도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현재 정치인 사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 많은데, 이러한 기반에서는 젊은 목소리를 내는 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합심하여 주인의식을 갖고 활동 간 연대성을 이룬다면, 통일운동은 시너지 효과를 통해 강한 울림을 낼 수 있을 것이다. 그 울림이 더욱 많은 너와 나를 하나로 묶고, 하나 된 우리의 염원이 통일의 문을 시원하게 여는 그 날이 어서 오길 바란다. 🌍

NETWORK 2015. 05+06 Vol.74

‘광복 70주년 기념’ 평화통일 대토론회 “한강의 기적에서 대동강의 기적으로”

3월 12일 목요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새로운 통일한국의 패러다임 - 한강의 기적에서 대동강의 기적으로’를 주제로 ‘광복 70주년 기념 평화통일 대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비롯하여 경실련통일협회,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북한연구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의 공동 주최로 진행된 대토론회는 경제분야의 ‘통일준비’ 방향, 특히 북한경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기관, 학회, 연구소, NGO 등 경제 관련 주요 단위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정책 건의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대 민주평통 수석부회장의 개회사, 주최 단체장들의 환영사에 이어 1, 2세션으로 진행된 토론회는 ‘대동강의 기적을 향하여 - 통일한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좌승희 영남대학교 교수가 발표하였고, 전홍택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의 사회로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 남성욱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이승률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이사장, 허경희 더나은세상연구소 대표가 토론으로 참여했다.

좌승희 교수는 그동안 북한을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로의 개혁·개방과 경제 발전으로 유도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이상적 체제이긴 하지만, 후진국이 선진국으로 경제발전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지에 대해서는 더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지배층의 입장에서 볼 때, 자유민주주의·시장체제는 실패했을 경우 ‘손실은 극대화’되지만, 성공했을 경우의 ‘이익은 불확실’한 인센티브 구조로 수용하기 곤란하다며, 북한 주민과 지도층, 한국의 이해 모두가 ‘윈-윈’하는 북한 경제개발과 평화통일의 길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

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 교수는 때문에 ‘先 경제(시장), 後 정치(체제)’ 원칙으로 제한적 민주주의와 정부 주도 시장경제 체제를 통한 경제발전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안했다. 즉 기존의 ‘사회주의나, 자유주의나’라는 선택지가 아닌 ‘대동강의 기적’이라는 제3의 선택지를 제공하자는 것인데, 이는 남북경제 분야의 상호시너지 극대화로 북한이 한반도의 새로운 역동성과 희망으로 부상할 수 있고, 평화공존, 자유왕래로 실질적인 통일효과를 향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좌 교수는 ‘대동강의 기적’을 통해 한 세대 뒤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이상이 되면, 궁극적으로 통일비용 없는 통일이 가능할 것이라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진 2세션은 ‘대동강의 기적을 위한 통일경제 로드맵-통일준비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조동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는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협력연구부장, 배종렬 통일경제연구협회 사무총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최수영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대동강의 기적’을 위한 통일경제 로드맵은 ‘한강의 기적’이 거둔 실효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 국제협력사업 차원에서 북한의 북방진출 유도, 북한 경제특구개발에서 수출자유지역 선정 및 기업금융 지원 모색, 농업분야에서 복합농촌단지 조성 사업을 통한 남북의 공동이익 실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민화협 2015년 1차 정책간담회 광복 70년, 한반도 통일환경과 민간차원의 역할 모색



민화협 정책위원회는 4월 8일 수요일 민화협 회의실에서 ‘2015년 민화협 제1차 정책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광복 70년, 한반도 통일환경과 민간차원의 역할 모색’을 주제로 진행된 간담회는 임강택 민화협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북한의 대외정책과 남북관계’를, 정낙근 여의도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이 ‘대북정책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민관협력방향’을 발표하였다. 토론에는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김중수 새정치민주연합 전문위원,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원장, 남성욱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 정책위원이 참석했고, 민화협 이성현 공동의장, 김영만 홍보위원장, 이규홍 조직위원장, 이경형 『민족화해』 편집인, 이영동 통일교육위원장, 진민자 여성위원장, 전지현 감사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간담회는 북한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및 대외전략,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 분석 등 한반도 정치정세를 진단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민화협을 비롯한 민간의 역할과 과제를 모색해보는 자리로 되었다. 참석자들은 민화협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독자적이고 고유한 역할과 위상이 있는 만큼, 이를 잘 살려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에 걸맞은 역할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통일교육네트워크 1차 간담회



2015년 통일교육네트워크 1차 간담회가 4월 27일 월요일 민화협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미래를 위한 합의 가능한 통일교육의 새로운 모색’이라는 주제로 민화협 통일교육위원회와 통일연구원, 남북하나재단, 한국교총, 어린이어깨동무, 새롭고 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등 현장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연구하는 단체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는 2015년도 통일교육 계획과 교육 현장에서의 문제점과 애로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지역 통일교육센터와 지역 하나센터의 연계 필요성, 변화한 상황에 맞는 통일교육 강사의 양성·재교육 방안,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통일교육 실시 문제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토론했었다.

한편 참가자들은 지속가능한 통일교육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통일교육 분야 공개토론회를 진행하자는 민화협 통일교육위원회의 제안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단체별 교육 사례와 통일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합의를 모색하는 「통일교육포럼」을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NETWORK 2015. 05+06 Vol.74

제2차 평화통일 대토론회 개최 “8천만이 행복한 통일의 미래상”

민화협과 민주평통 등 8개 기관이 공동주최하는 ‘광복 70주년 기념 제2차 평화통일 대토론회’가 오는 5월 19일 화요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다. 광복 및 분단 70년을 맞아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개최되는 토론회는 민주평통과 민화협을 비롯하여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원불교, 천주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이 공동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8천만이 행복한 통일한국의 미래상’이란 큰 주제 하에 1세션 ‘통일한국 미래상-무슨 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서 남궁영 한국외국어대 정치행정언론대학원장의 사회로,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이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정문헌 새누리당 국회의원, 홍순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한다.

이어 2세션은 “통일준비,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 종교계의 제안”을 주제로 라운드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박종화 경동교회 담임목사의 사회로 노정선 NCKK화해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엄기호 한기총 남북교회협력위원장, 이은형 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총무, 정인호 원불교 한민족한삶운동본부장, 지홍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등이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2015’ 민화협 “남북민간교류 발전 과제” 세미나 개최

오는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되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2015’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린다. 총 60여 개의 세션으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서 민화협은 5월 22일 ‘광복 70년, 남북민간교류 발전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

다.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포럼은 노르베르트 에쉬보른 독일 아데나워 한국소장이 ‘독일 통합과정에서의 민간교류 정책과 사회통합’을,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남북 신뢰구축을 위한 민간교류의 역할과 과제’를, 최용환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자체 간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민관협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토론에는 고성준 제주대학교 교수,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민화협이 준비한 이번 포럼은 그동안 남북 민간교류가 당국 간 정치, 군사적 상황으로 인해 지속성과 자율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을 검토하고, 동시에 해외의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남북교류에 있어 민간의 역할, 지자체와의 협력 등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모색하기 위한 역내 다자협력 논의의 장으로 출범했다. ‘제주평화포럼’이라는 명칭으로 2001년 제1회 포럼을 개최한 이래 2011년 제6회 포럼까지 격년제로 개최되어 왔다. 제6회 포럼부터 명칭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으로 변경하였으며, 2012년 제7회 제주포럼을 시작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창의적 발상에 기초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역내 평화와 협력을 위한 대화의 장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세계평화 및 국제협력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이라는 일관된 주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평화와 상호 협력, 발전에 대한 실천적 방안을 찾는 동시에 이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제2회 청소년 통일공감 대토론회 개최

민화협은 청소년들에게 평화통일문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바람직한 통일관을 정립할 목적으로 ‘제2회 청소년 통일공감 대토론회’를 6월 14일 일요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개최한다. 전국 초·중·고 각 32팀(3인 1팀) 총 96팀 288명이 참가하는 이번 행사는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 형식의 찬반토론으로 진행되며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사)1090평화와 통일운동, 민화협 통일교육위원회, 한국디베이트코치협회, 투게더디베이트클럽이 주관하고, 통일부,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 **대회 일시 및 장소** 2015년 6월 14일(일) | 이화여자대학교 LG컨벤션 홀 · ECC

• 토론 주제

초등 주제	북한관광을 재개해야 한다.
중등 주제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남북경제협력은 확대되어야 한다.
고등 주제	통일준비를 위해 정부예산으로 통일기금을 즉각 적립해야 한다.

• 참가자 모집 및 발표

- 접수 : 2015년 5월 12일(화) ~ 14일(목), 초·중·고 접수기간 상이

- 필요서류 : 참가신청서, 교장추천서, 서약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 필요서류는 민화협 홈페이지 www.kcrc.or.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구분	모집일	내용	비고
접수	5월 12일(화)	초등 : 2015년 5월 12일(화) 17시 ~	※ 선착순 마감 (학교별 2팀 제한)
	5월 13일(수)	중등 : 2015년 5월 13일(수) 17시 ~	
	5월 14일(목)	고등 : 2015년 5월 14일(목) 17시 ~	
참가자 발표	5월 19일(화)	대회 홈페이지 및 문자 연락	

• 문의 : 대회조직위원회 070-7510-8443

NEW BOOK

‘전쟁의 기원’에서
‘평화의 기원’으로

그동안 6·25전쟁을 둘러싼 가장 뜨거운 논쟁 중 하나는 ‘전쟁의 기원’에 대한 규명, 증명이었다. 그것이 내전이나 국가 간 전쟁이냐, 즉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를 둘러싼 논쟁이었다. 이는 전쟁의 참혹한 결과와 고통, 상흔을 전쟁 발발의 기원에 있다고 간주하고 전쟁의 가공할 결과를 모두 전쟁을 시작한 ‘적들의 책임’으로 귀속시키고 단죄하고 처벌하려는 형법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쟁의 성격과 책임 자체를 냉정하고 깊이 있게 성찰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기보다, 어느 한쪽의 정치적 입장을 선택하고 강화하는 정치투쟁에 압도되곤 했다.

저자는 이러한 ‘비난 게임’, ‘영구 투쟁 상태’에서 벗어나 ‘전쟁의 기원’이라는 문제의식에서 ‘평화의 기원’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안한다. 즉 6·25전쟁 자체가 처음부터 내전이나 국제전 같은 특정한 형태의 전쟁임과 동시에 특정한 평화 계획들과 맞물려 그 자장 속에서 전개되고 종식되었다는 것이다.

6·25전쟁 연구 또한 그동안 미국의 냉전 연구, 즉 소련의 책임을 묻고 비난하는 전통주의와 미국의 책임을 강조하는 비판적 수정주의 그리고 탈냉전 이후 소련과 동구권 문서고의 실증적 역사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기존의 정치적 주장들을 반박하고 수정하는 탈수정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왔다. 특히 연구들이 오랫동안 전쟁 발발의 기원 문제에 천착했던 것에는 전쟁의 책임을 둘러싼 냉전

의 정치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었으며, 그 결과 6·25전쟁은 국제전인가 내전인가라는 이분법적 선택의 구도로 논쟁이 주도되어왔다.

저자는 그 결과 특정한 평화 체제로서의 판문점 체제의 제도적 형태와 ‘평화의 성격’에 대해 크게 고민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예컨대, 6·25전쟁은 왜 군사적 실무 차원의 정전 협상으로 종식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는가? 저자는 그것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진행된 전 지구적 자유주의 국제법 질서의 구축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즉 6·25전쟁을 종식시킬 평화 체제의 성격과 형태에 대한 논쟁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무조건 항복과 뉘른베르크 재판, 도쿄 재판 그리고 유엔 헌장과 제네바 협정, 냉전과 중국의 개입 같은 무거운 국제법적 쟁점과 논란들이 연계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책을 통해 냉전 이전부터 형성되어 온 자유주의적 평화 기획의 장기적인 역사적 형성과 변화에 주목하여 20세기 자유주의 평화 기획을 분석하고 있다. 오랫동안 진영논리와 냉전 체제의 굴레 속에서 다뤄진 6·25전쟁을 세계와 평화의 관점에서 포착해 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시도이자 지적 성취이다.

1 「판문점 체제의 기원」
김학재 / 후마니타스 / 2015. 3



NEW BOOK



2 「통일인문학」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 알렙 / 2015. 2

책은 여러 인문학적 연구 성과를 통섭적으로 연구하여, 기존의 경제·정치 등 사회과학적 관점에 사로잡힌 통일 문제를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삶의 문제로 바라보려 시도한다. 통일인문학은 ‘체제의 통일’을 넘어 ‘사람의 통일’로, 분단과 대결의 시대를 넘어 통일과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인문학적 성찰과 지혜를 모으고자 하는 출발점이다.



3 「남북 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신국욱 외 / 한울 / 2015. 3

미국 스탠퍼드대 한국학 프로그램에 몸담고 있는 저자들은 북한을 둘러싼 주요 관련국의 정책 변수와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대북정책을 살펴보고, 과정이나 목표에 불과한 대북정책을 넘어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제안한다. 부록으로 실린 브루킹스연구소 간담회 회의록을 통해서도 대북정책과 맞춤형 인게이지먼트에 대한 미국 측 인사들의 의중을 엿볼 수 있다.



4 「동북아 국제정치 질서, 어디로 가나」
오코노기 마사오 외 / 푸른역사 / 2015. 3

제목의 질문에 대한 국내외 국제정치 전문가들의 모색이 담겨 있다. 한일관계의 현재와 미래, 시진핑 시대의 중국, 남북관계의 변화양상과 평화통일 전망,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 변화와 우리나라의 정책적 시사점, 동아시아 국제정치 양상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 등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정치의 흐름과 변화를 살펴본다. 우리의 생존과 번영, 나아가 통일을 준비하는 데 지혜를 전해주고 있다.



5 「반공의 시대」 강명세 외 / 돌베개 / 2015. 3

한국과 독일의 저명한 사회학자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반공주의가 양국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그 부정적 유산들과 이데올로기적 균열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공동으로 연구한 성과물이다. 보수 - 진보, 여당 - 야당의 간극과 사회적 분열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건설적 태도와 충분한 지식, 관용을 바탕으로 이데올로기적 차이에 대처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자는 것이 책의 취지다.

민화협 사서함

2015.
March
April
Vol. 73

민화협 사서함은
독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을
소개해 드립니다.



〈독자엽서〉로 정답과 의견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73호의 정답은
②번 '통일전망대'입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 폰으로 우측 QR코드를
스캔하면 보다 편리하게 민화협
소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김규선 연천군수의 인터뷰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연천군이 소외지역을 넘어 통일의 기
적을 만드는 곳으로 거듭나길,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대부분은 접
경지역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북을 가까이 하고 있기에 불안심리와 두려움이 작용하
는 것 같습니다. 김규선 군수의 각오는 튼튼한 안보 속에 북한과 공존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진
정한 '통일대박'의 사례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연천군이 이러한 꿈을 반드시 이루기
를 바라봅니다. - 박은정 서울시 도봉구

◎ 울거울은 유난히 춥고 불황이어서 움츠림과 답답함의 연속이었는데 『민족화해』를 읽고 나
니 이 세상이 달라 보이고 기분마저 상쾌하게 바뀌었습니다. 바쁜 생활을 하느라 봄이 가까이 온
것도 못 느끼고 있었는데 포토 에세이 '너와 나 함께 봄을 맞으리' 글 덕분에 봄이 우리 곁에 가까
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희열도 느꼈습니다. 이경형 편집인의 'DMZ의 생태는 이미 통
일을 이뤘고, 한반도 한겨레의 봄도 분명 오고 있다'라는 글귀를 가슴 깊이 간직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 강현숙 경기 시흥시

◎ “젊은 통일·신나는 통일”에 소개된 '헌 교과서 날개를 달다' 기사를 읽는 내내 우리 어린 학
생들의 정성스런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무심코 버려졌던 헌 교과서 한 권 한 권이
우리 어린 학생들의 정성을 품고 새 생명으로 탄생하여 해외 한민족 친구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
중한 선물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너무나 반갑고 흐뭇한 마음이 듭니다. 이처럼 헌 교과서 수
거를 통한 한민족 어린이 지원사업이야말로 한반도 어린이들의 올바른 통일 의식 함양과 더불어
민족애를 고취시킬 수 있는 소중한 나눔 캠페인이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
들이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을 향한 꿈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기회와 사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
습니다. - 조한석 경기 의정부시

◎ '통일담론, 마음의 장벽을 허물어야' 글을 잘 읽었습니다. 아직도 남북문제는 철옹성 같다
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서 속히 불신의 장벽을 넘어 남북 모두가 화해의 장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
람입니다. 정부를 비롯해 통일을 염원하는 모두가 앞장서 남북화해를 위해 노력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광복 70주년을 맞는 올해 남북 모두 진정한 평화의 길로, 화해의 길로 가기를 바라는 마
음입니다. - 심혜화 충북 보은군

◎ '살아있는 북한뉴스 어떻게 만드나'를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독
일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경제통합과 함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던 것이 문화동질성을 잃지
않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아닌가 싶은데, 분단 70년의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민족문화 동질
화를 위한 노력이 우리에게 큰 과제가 아닐까 싶네요. 남북 문화교류협력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
기 위해서는 이렇게 역사사지의 입장에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
각해 봅니다. 실행민이나 북한이탈주민은 물론이고, 많은 분들이 북한 관련 뉴스나 문화를 보다
관심을 갖고 접해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 전경옥 경기 평택시



민족화해 E-Book



민화협 블로그
blog.naver.com/kcrcpolicy



민화협 페이스북
www.facebook.com/kcrc1213



민화협 홈페이지
www.kcrc.or.kr

제2회 청소년 통일공감 대토론회

2015년 6월 14일(일)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 ECC)



접 수 일 초등 2015년 5월 12(화) 17시부터 선착순 마감
중등 2015년 5월 13(수) 17시부터 선착순 마감
고등 2015년 5월 14(목) 17시부터 선착순 마감

참가 대상 전국 초(4, 5, 6학년)·중·고 학생
(3인 1팀 초·중·고 각 32개팀 / 총 96개팀)

형 식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 우리말 토론

참 가 비 무료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문의 070-7510-8443

이메일 tongildebate@naver.com

인터넷 카페 <http://cafe.naver.com/tongildebate>
<http://cafe.naver.com/togetherdebateclub>

주 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www.kcrc.or.kr

주 관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1090 평화와 통일운동

한국디베이트코치협회 민화협 통일교육위원회 Together Debate Club

후 원 통일부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한국교육연구진흥원